

# 주간 통일정세

2015-14

## Contents

### I. 북한동향

1. 대남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3. 대내정치
4. 경제
5. 사회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납북자
6. 국군포로
7. 대북지원
8. 북한동향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동향

### 1. 대남

####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북한, 남한 농민들에 TPP 가입 반대투쟁 촉구(4/6, 조선중앙통신)
  - 조선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은 6일 한미 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협상에 속도가 붙은 것과 관련해 남한 농민들이 이를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6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농근맹 중앙위원회는 이날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고 남한 당국의 TPP 가입 협상에 대해 “농업 주권을 외세에 팔아먹고 농민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용서 받지 못할 반인민적 범죄행위”라고 주장함.
  - 이어 남한 정부와 여당을 향해 “남조선을 미국의 식민지로, 핵 침략 전쟁의 전초기지로 내맡기고도 모자라 농민들의 생존권까지 깡그리 바치려 한다”면서 “반역의 무리, 반인민적 악당들은 반드시 쓸어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함.
  
- 북한, 남한 간첩사건 비난…“반기독교적 범죄”(4/7, 조선중앙통신)
  - 조선그리스도연맹(조그련)이 7일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이번에 억류된 2명의 남한 주민을 “미국과 괴뢰당국의 꼬나풀이 되어 정탐모략행위만을 일삼으면서 동족을 모해하고 북남관계개선에 장애를 조성해나가는 사이비종교인”이라고 주장함.
  - 대변인은 이번에 억류된 김국기 선교사가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중앙이 김씨가 간첩이 아니라며 즉각 송환을 촉구한 것에 대해 “그가 실지로 자기 교단 소속 목사라면 그의 행위에 대해 수치스럽게 여기고 무조건 사죄해야 한다”고 밝힘.
  - 또 “남조선의 모든 그리스도교 단체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신성한 종교인들까지 정탐모략행위에 끌어들이고 있는데 대해 각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임.

- 북한, '사드 논의' 또 비난...“남한 정권 심판해야”(4/9,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9일 서기국 보도에서 남한에서 진행 중인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논의에 대해 비난하며 “박근혜 패당이 미국산 무기 구입의 명목으로 상전에게 섬겨바치는 돈이면 남조선의 수백만명의 실업자들과 수많은 집없는 세대들에게 일자리와 집을 마련해주고 삶의 막바지에서 허덕이고있는 빈곤층을 구제할수 있다”고 비난함.
  - 조평통은 “친미사대 매국과 동족대결로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 온 민족을 핵참화에 몰아넣는 괴뢰역적패당의 범죄적 책동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면서 남한 국민에게 정권을 단호히 심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통신은 전함.

##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북한 “간첩사건 가담자 처단은 정당한 자위권 행사”(4/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6일 ‘정탐모략범죄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간첩사건) 조직자, 가담자, 추종자들을 처단하는 것은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함.
  - 신문은 “혁명 수뇌부를 노리고 테러까지 획책한 범죄자들이 도리어 큰소리를 치고 있다”며 “그 누구도 특대형 정치테러행위에 가담한 자들을 처벌하려는 우리의 결심과 의지에 대해 시비할 권리가 없다”고 못 박음.
  - 신문은 이어 남한 정부에 대해 “동족에 대한 거부감과 대결관념이 들어차 정보원과 인신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범죄단체들을 내몰아 주민들에 대한 반인륜적인 납치행위와 공화국에 대한 정보수집, 내부교란을 노린 매수공작을 벌였다”고 비난함.
- 북한 “‘드레스덴 구상’은 흡수통일 위한 대결선언”(4/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7일 ‘책임회피를 위한 뻔뻔스러운 말장난’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남관계가 파국에 처한 원인은 괴뢰당국이 외세와 야합해 반공화국 압살 야망을 획책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 특히 5.24 조치, 한미 합동군사훈련,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태도는 날강도적인 처사”라며 “5.24 조치가 유지되는

속에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자주통일의 대통로가 열릴 수 없다”고 강조함.

- 신문은 또 “드레스덴 구상은 남한 주도의 체제통일하려는 대결선언”이라며 “남한이 종미사대와 체제대결을 한다면 남북관계는 개선될 수 없고 민족에게 핵재난이 드리워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 북한, 사드 배치 논의 비난…“남한은 동네북 신세”(4/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7일 ‘예속의 굴레를 쓰고 걸어온 치욕의 역사’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사드 배치가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이는 “사대와 굴종이라는 괴뢰 외교의 뿌리 깊은 고질병”이라고 강변함.
- 신문은 또 “강대국들 사이에 끼운 샌드위치 신세,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라는 한탄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 있다”면서 남한은 “사방에서 압력을 받아 동네북 신세”라고 비난함.

■ 북한 ‘전단살포 적극 활용’ 주장에 강력반발(4/11, 노동신문)

- 북한은 이정훈 외교부 인권대사가 대북전단 등 대북심리전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한 데 대해 ‘용납 못할 망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함.
- 노동신문은 11일 ‘위선과 기만의 탈은 벗겨졌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인권대사의 이번 망동은 대북 전단살포가 (대북단체의) 자율적인 행동이 아니라 남조선 당국의 개입과 추동에 따른 고의적인 도발이라는 것을 입증했다”고 주장함.
- 신문은 “자나깨나 반민족적인 체제통일을 추구하며 남북관계 파괴에 열을 올리는 남조선과는 두 번 다시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며 “(남한은) 반공화국 심리모략전 감행에 대한 우리의 무자비한 보복타격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위협함.

####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특이사항 없음.

## 라. 대남 군사 관계

- 북한 KN-08 미사일, 3단 구조 추정(4/8, 연합뉴스)
  - 항공우주분야 연구기관 에어로스페이스 코퍼레이션의 존 실링 연구원은 7일(현지시간)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북한이 개발 중인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KN-08이 3단 추진체로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8일 보도함.
  - 실링 연구원이 추정한 KN-08 추진체 1단은 스커드 탄도미사일에 쓰인 엔진 4개로 구성돼 있고, 2단 추진체의 동력은 구소련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R-27에 쓰인 엔진 1개가 맡으며 3단 추진체의 엔진으로는 R-27 미사일의 궤도수정용 보조엔진 2대가 쓰였을 수 있다고 실링 연구원은 밝힘.
  - 실링 연구원은 북한이 충분한 외부 지원을 받아 순조롭게 미사일 기술을 획득하는 최악의 경우 2020년까지 초기 작전수행능력을 갖춘 20~30발의 KN-08 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은 물론, 최대 사거리를 1만5천km까지 늘려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개량형 KN-08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함.

## 마. 남북 경제 관계

- '개성공단 임금 갈등' 남북 첫 접촉...입장차만 확인(4/8, 연합뉴스)
  -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최저임금의 인상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과 관련,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지난 7일 처음으로 접촉했다고 연합뉴스가 8일 보도함.
  -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오후 관리위(남측)와 총국(북측) 간에 접촉이 있었으나 북한은 임금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던 것으로 우리 정부는 알고 있다”고 밝힘.
  - 또 “북측은 어제 접촉에서 노동규정을 채택하고 시행하는 문제는 북한의 권한이지 당국 간 협의할 성격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 우리 정부가 북한에 요구하는 것은 관리위와 총국 간에 임금인상 문제를 협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뉴스는 전함.

## 바. 남북 사회 관계

### ■ 특이사항 없음.

- ‘중복론’ 관련 ‘괴뢰들의 동족대결정책을 정당화하고 남조선 인민들의 반전평화투쟁을 말살하며 북침전쟁도발책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한 위험한 대결론·전쟁론·악랄한 모략설’이라고 재차 주장(4.8, 중앙통신·노동신문)
- 대통령의 북핵 발언들(북핵문제가 가장 큰 안보위협, 핵과 장거리탄도미사일개발로 안보를 지속 위협 등) 관련 ‘동족을 물어 메치기 못해 몸살 하는 대결광신자들의 파렴치한 궤변’이라며 ‘종미사대와 체제대결에 매달리는 한 남북관계는 개선될 수 없고 전쟁밖에 차례질 것이 없다’고 위협(4.8, 중앙통신·민주조선)
- 이정훈(외교부) 인권대사의 기고(통일플러스, 통일연구원 발간)글(對北전단 등 수단을 적극 활용) 관련 ‘인간쓰레기들의 자율적인 행동이 아닌 괴뢰당국의 개입과 추동에 따른 고의적 도발소동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었다’며 ‘반공화국심리모략전의 수단이 어느 곳에서 감행되든 보복타격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위협(4.11, 중앙통신·노동신문)

##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 가. 공식발언과 제안

#### ■ 특이사항 없음.

### 나. 주요 매체 논평

- 북한, 이란 핵합의 침묵...‘입맛’에 맞는 주장만 소개(4/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6일 이란 총참모부 부참모장이 지난 1일 “이란도 나라와 전세계 피압박 인민들의 이익을 위해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고 전함.
  - 통신은 또 핵협상의 실무를 맡은 압바스 아라키 이란 외무차관의 TV 기자회견 내용도 자세하게 소개하며 “그는 이란의 금융, 원유 등 부문에 대한 제재를

중지하는 것이 핵 합의의 가장 중요한 기초로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며 “대이란 제재가 완전히 철회되지 않는 한 핵회담에서 그 어떤 합의도 이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고 전함.

- 북한 “미사일 발사, 도발 아닌 정당한 자주권 행사”(4/10,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10일 ‘미국방장관의 행각 따위에 할 것을 안하겠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한미군사연습에 대응해 “우리의 영토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떨어진다 면 섬멸적 반타격을 안기기 위한 훈련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함.
  - 우리민족끼리는 “괴뢰패당이 정당한 자위적 조치를 미 국방장관의 남조선 행각에 대한 ‘미사일 도발’이라며 적반하장격으로 놀아대고 있다”면서 오히려 한국과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논의로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고 있다고 비난함.
  
- 북한 “일본 군국화 제2의 패망 불러오는 길”(4/1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2일 ‘일본의 군국화어로 떠민 미국의 죄행과 그 위험성’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일본에 있어서 군국화는 제2의 패망을 불러오는 길”이라며 “올해 죄 많은 과거를 청산하기 위한 대응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함.
  - 신문은 먼저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과 같은 대국간에 치열한 군비 경쟁이 벌어지면서 동북아 지역이 ‘군사장비 전시장’, ‘군사도박장’이 되었다며 “이 모든 행위의 뒤에는 미국이 있다”고 책임을 돌림.
  - 이어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중시전략에 의해 걸머지게 되는 무거운 군사비 부담을 일본에 떠넘기며 세계제패 야망을 실현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일본을 군국화의 길로 더욱 떠미는 ‘범죄적 망동’이라고 비판함.
  - 북한은 “미국과 일본 반동들은 역사의 흐름을 되돌려보려고 발악하지만 그것은 헛된 망상”이라며 “일본 반동들은 미국을 등에 업고 재침의 길에 뛰어들려고 하다가는 비참한 처지에 빠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함.

####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 라. 대미국

- 북한, 미국인 활동가 ‘산드라 서’ 추방…“17년간 모략행위”(4/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8일 지난 17년간 대북지원 활동을 해온 미국인 ‘산드라 서’씨를 ‘모략·선전행위’로 추방을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통신은 서씨가 “근 20년 동안 ‘무상기증’의 명목으로 조국(북한)에 드나들면서 반공화국 모략·선전행위에 가담했다”면서 관계기관이 서씨를 조사한 결과 이런 혐의를 밝혀냈다고 보도함.
  - 통신은 서씨가 이에 대해 “공화국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공화국법을 위반한 씻을 수 없는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죄하였다”며 용서를 구했다고 전했으며 조사 기관은 “공화국법의 관대성과 산드라 서의 연령상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그를 공화국 경내에서 추방하기로 했다”고 밝힘.
- “북한 추방 산드라 서씨, 매년 200만 달러 물자지원”(4/11,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최근 ‘모략·선전행위’ 혐의로 추방한 미국인 산드라 서씨는 지난 25년간 해마다 2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 활동을 해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보도함.
  - 서씨와 함께 대북지원 활동을 해온 최재영 목사는 지난 9일 RFA와 인터뷰에서 “서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대북지원 사업의 대모 격”이라면서 “의약품이나 의료 기기, 신발, 식량 등을 보냈다”고 밝힘.

## 마. 대중국

- 특이사항 없음.

## 바. 대일본

- 북한, 조선총련에 장학금 21억원 전달(4/11,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15일)을 맞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에 장학금 2억3천804만 엔(약 21억6천

400만원)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함.

- 통신은 이 돈이 “재일동포 자녀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교육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 사. 대러시아

### ■ 러 외무차관 “모스크바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아직 없어”(4/8,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8일 이고리 모르굴로프 외무부 아태담당 차관이 ‘러시아가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행사에서 남북한 정상 간 만남을 주선할 계획인가’라는 리아노보스티 통신의 질문에 “한국 측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에 관한) 답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얘기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고 전함.
- 지금까지 행사 참석을 확인한 지도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쓰영편 상 베트남 국가주석,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비서 등으로 알려졌다고 뉴스는 밝힘.

### ■ 김정은 방러 앞두고 북한 부총리 내주 모스크바 방문(4/10, 연합뉴스)

- 북한의 로두철 내각 부총리가 궁석웅 부상과 함께 오는 13일부터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14일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 겸 극동연방지구 대통령 전권대표 등 러시아 정부 인사들과 만날 계획이라고 10일 연합뉴스가 전함.
- 로 부총리의 방문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다음 달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루어져 주목되며 부총리 등의 모스크바 방문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방러 계획에 앞서 이루어지는 만큼 양국 정상회담 의제 조율 등을 위한 사전 준비 차원일 수 있다고 뉴스는 밝힘.

## 아. 국제기구

### ■ 남북, 유엔서 핵 문제 놓고 공방전 벌여(4/9, 미국의소리)

- 남북한이 유엔 군축위원회에서 북한 핵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고

-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9일 보도함.
- 백지아 한국 유엔대표부 차석대사는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이 국제 비확산 체제의 초석임을 강조하고 이란과 서방 6개국이 핵 협상에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북한 핵 문제가 비확산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공격함.
  - 이에 대해 안명훈 북한 유엔대표부 차석대사는 반론권을 얻어 “한국과 미국이 합동군사훈련을 통해 대북 적대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백 차석대사는 외면하고 있다”고 반박했으며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라는 외부 조건에 대한 억제 수단으로 핵무기를 보유 중이며 적대 정책이 계속되는 한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함.

## 자. 기타 국가

- 유엔 주재 북한 외교관리 “우리는 이란과 다르다”(4/8, 미국의소리)
  - 북한의 외교 관리가 최근 핵 협상안에 합의한 이란과 북한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8일 보도함.
  - 익명을 요구한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관리는 지난 6일 VOA와 인터뷰에서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된 것은 북한과 아무 관계가 없다”며 “합의는 이란인들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북한은 관심이 없다”고 밝힘.
  - 이 관리는 “미국이 1년에 몇 차례씩 이란 인근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합동군사 훈련을 벌인다면 이란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핵무기 보유의 이유를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돌렸다고 방송은 덧붙임.

- 노동당 중앙위원회, 4월 6일 ‘아랍사회부흥당’ 앞으로 당 창건 68주년 축전(4.6, 중앙통신·중앙방송)
- 주북 무관단, 4월 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4.9) 22주년과 김정은 당 제1비서 추대(4.11) 3주년을 즈음하여 김정은에게 꽃바구니와 축하편지 전달(4.6, 중앙통신)
- 최근 일본의 군사대국화 박차(3.26,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의 초정밀 정보수집 위성 ‘광학5호기’ 탑재 H2A 로켓 발사·3.25, 해상자위대 구축함 ‘이즈모함’ 취역 등)는 “군국화와 조선반도 재침야망에 환장한 자들의 군사적 망동”이라고 비난(4.7, 중앙통신·민주조선)
- 최태복(黨 비서), 4월 7일 新任 주북 시리아 대사(타맘 슬레이만)와 담화(4.7, 중앙통신·중앙방송)

- 남승우 「총련」 부의장 등(강추련 「총련」 부의장 겸 재일본 「여맹」 위원장) 「총련」 대의원들, 4월 7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3차 회의 (※ 4월 9일 예고) 참가 위해 평양 도착 (4.7, 중앙통신)
- 보스워스 전 駐韓 美대사의 '日 과거사' 발언(과거로 회귀해서는 안된다...독일 선례 따라야) 관련 '과거범죄 책임을 요리 조리 회피하는 일본에 주는 국제사회의 충고'라고 지적하며 '독일의 모범을 따르지 않고 반대되게 행동한다면 차례질 것은 모욕과 고립뿐'이라고 주장(4.8, 중앙통신·노동신문)
-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단장 : 홍영철), 4월 9일 평양 도착 및 만수대언덕 김일성·김정일 동상 참배(4.9, 중앙통신·중앙방송)
- 주북 외교단, 4월 10일 김정은에게 '태양절(4.15)·김정은 黨 제1비서 추대(4.11)' 3주년 즈음 꽃바구니·축하편지를 리수용(외무상) 통해 전달(4.10, 중앙통신·중앙방송)
- 주북 무관단, 4월 10일 '태양절' 즈음 평양육아원·애육원 참관(4.10, 중앙통신·중앙방송)
- 카자흐스탄 외무성 대표단, 4월 10일 만경대 방문 및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옥류아동병원 참관(4.10, 중앙통신·중앙방송)
- '일본에 있어서 군국화는 제2의 패망을 불러오는 길'이라며 '일본반동들은 어리석은 야망을 버리고 패망 70년이 되는 올해에 죄 많은 과거를 청산하기 위한 대응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4.12, 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일성 생일(태양절, 4.15)을 즈음하여 항일혁명투쟁연고자 가족들의 영화(마식령스키장)감상회, 4월 9일 주중 北대사관에서 진행(4.12, 중앙통신)
- 김일성화·김정일화보급후원회 명예회장(라트나 사리데비 수카르노)과 일행, 4월 12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4.12, 중앙통신·중앙방송)

### 3. 대내 정치

#### 가. 김정은 동향

- 북한 김정은, 미사일부품 공장 시찰...“제품의 주체화”(4/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黨 제1비서가 군수용 전자설비를 생산하는 평양시내 공장을 시찰했다고 8일 전함.
  - 이날 현지지도는 홍영철 당 기계공업부(군수전담) 부부장과 윤동현 인민무력부 부부장이 수행했으며 그는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 식대로 새 제품개발사업을 다그쳐야 약전기계제품생산의 주체화, 국산화를 실현할 수 있다”며 “생산량을 부단히 늘리며 제품의 정밀성, 안정성, 실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고 강조함.

- 김 黨 제1비서는 또 “공장 노동계급이 군자리 노동계급처럼 투쟁한다면 조선노동당창건 70주년 전으로 최첨단 약전기계제품을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독려함.

- 북한 김정은, 오른 손목에 부상…거즈와 반창고 붙여(4/8, 조선중앙TV, 연합뉴스)
  - 조선중앙TV는 8일 오후 평양약전(弱電)기계공장 현지지도 소식을 전했는데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오른 손목에 커다란 거즈와 반창고가 붙어 있는 모습이 방영됐음.
  - 특히 김정은 黨 제 1비서는 공장 직원들을 향해 손을 흔드는 모습에서는 손등 아랫부분부터 손목까지 거즈로 보이는 흰색 형겁이 붙어 있었고 흰색 반창고로 고정돼 있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다른 사진 속에서도 김 黨 제1비서는 검정 코트 속으로 오른 손목 부위를 감싼 거즈가 나타났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함.
  - 북한 매체가 지난 4일 보도한 김정은 黨 제 1비서의 군 제164군부대 시찰 사진에서는 손목 부위의 부상 모습이 포착되지 않아 최근 며칠 사이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며 현지지도 등 공개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는 밝힘.
- 북한 김정은, 주요시설 건설자에 감사 전달(4/10, 조선중앙방송)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黨 제1비서가 주요 시설 건설을 지원한 간부와 근로자에게 감사를 전달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0일 전함.
  - 이에 따라 전국의 종합상점, 종합양복점, 소아병원, 국가발명국, 식료공장, 철도 건설여단, 농업출판사, 철도주택건설대, 건물관리소, 국토환경보호관리국 등에 소속된 간부와 근로자 총 13명이 김 黨 제1비서가 자택으로 전달한 감사인사를 받았다고 방송은 덧붙임.
- 평양공항 완공단계…김정은, 시찰서 내부시공 지적(4/1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2일 김 제1위원장이 김양건 노동당 비서, 리재일·리병철 당 제1부부장, 김여정·김능오 당 부부장을 대동하고 평양국제비행장 (순안국제공항) 2항공역사 공사 현장을 시찰했으며, 건설장에서는 강기섭 민용항공총공장과 림광웅을 비롯한 간부들이 김 제1위원장 일행을 맞이했다고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현지시찰에서 “내부 시공에서 나타난 일련의 부족점만 바로잡으면 훌륭히 완공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해진 기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높은 민족적 자존심을 안고 항공역사를 평양의 관문답게 사회주의 제도의 자랑스러운 면모를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완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 김 제1위원장은 또 각종 시설 배치, 장식물 디자인, 가구 배치와 관련해 ‘국제적 기준’, ‘세계적 추세’를 충족시킬 것을 강조하면서 손님들이 어디서나 비행기 이착륙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영상표시장치를 설치할 것을 지시함.

####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북한 식료일용공업상 조영철 부상으로 강등(4/6, 조선중앙방송, 연합뉴스)
  - 조선중앙방송은 6일 각지 노동자들이 식료일용공업부문 3월 계획을 완수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조영철을 식료일용공업성 부상으로 호명함.
  - 조영철은 평양 용성식료공장 지배인과 식료일용공업성 국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 2010년 식료일용공업상에 임명됐으나 5년만에 부상으로 강등된 것으로 신임 식료일용공업상이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 황병서, 북한 권력서열 2위...정치국 상무위원에 올라(4/8, 조선중앙TV, 연합뉴스)
  - 조선중앙TV는 8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22주년 중앙보고대회 소식을 전하면서 보고자로 나선 황병서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로 호칭함.
  - 노동당은 지난 2월 김정은 국방위원회 黨 제1비서 주제로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조직(인사) 문제’를 논의했던 만큼 황병서는 이 회의에서 상무위원에 임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는 분석함.

#### 다. 공식 행사

- 북한, 최고인민회의 열어 국방위원 교체...김정은 불참(4/9,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3차회의가 9일 평양 만수대의사

당에서 열렸다고 보도했으며 이날 회의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黨 제1비서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 북한은 국방위원회 위원을 박도춘 노동당 군수담당 비서에서 김춘섭 전 자강도 당 책임비서로 교체했으며 군수공장이 밀집해 있는 자강도 당 책임비서를 지낸 김춘섭이 이번에 박도춘을 밀어내고 국방위원에 선임된 것으로 미뤄 신임 당 군수담당 비서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는 밝힘.
- 북한은 또 올해 예산을 작년보다 5.5%로 늘리기로 결정하고 특히 국방비 비중을 전체 예산의 15.9%로 책정해 지난해와 같은 비율의 예산을 국방분야에 투입하기로 결정함.
- 예산 중 체육부문 지출 증가율을 작년 17.1%에서 올해 6.9%로 줄이는 대신 문화부문은 1.3%에서 6.2%로, 과학기술부문은 3.6%에서 5%로 늘리기로 해 앞으로 문화와 과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임을 보여줬으며 특히 산림부문 예산 증가율을 각 분야 중 가장 높은 9.6%로 책정해 최근 김정은 黨 제1비서가 강조한 조림사업에 주력할 것임을 확인함.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추대 3주년…충성 다짐(4/11, 연합뉴스)

- 북한은 11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추대(4월 11일)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추대(4월 13일) 3주년을 맞아 중앙보고대회를 열고 그의 치적을 찬양하며 충성을 다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11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보고대회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룡해·김평해·곽범기·최태복 당비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등 고위 간부들이 대거 참석함.
- 최룡해 비서는 행사 보고에서 “지난 3년간의 하루하루는 김정은 동지의 정치의 위대성이 산 현실로 과시되고 현시대의 정치 거장으로서의 절대적인 권위와 명성이 온 세상에 힘있게 펼쳐지는 긍지 높은 나날이었다”고 찬양함.
- 이어 인공위성 제작 및 발사, ‘핵보유국’ 지위 공고화, 인민생활 향상 등 김정은 체제의 성과로 내세우는 사례들을 언급하며 김 제1위원장의 정치는 모든 면에서 “능숙한 수완으로 기적만을 창조하는 가장 위력한 정치”라고 주장함.
- 최 비서는 모든 간부와 주민들에게 “김정은 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위하며 일편단심 원수님의 사상과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야 하겠다”고 주문했다고 뉴스는 전함.

##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북한에 푸 양말 있나?”…김정은의 ‘캐릭터 사랑’ (4/10, 조선의 오늘)
  - 10일 북한의 대외용 웹사이트인 ‘조선의 오늘’은 지난해 7월 김 黨 제1비서가 평양양말공장을 방문했을 때 아동양말 견본을 둘러보며 영국의 아기곰 캐릭터 ‘푸’와 일본의 고양이 캐릭터인 ‘키티’가 그려진 양말을 찾은 일화를 소개함.
  - 김 黨 제1비서는 여러 종류의 아동양말을 살펴보다가 발목에 고양이가 그려진 양말을 보고 “키티 양말이 있구만”이라며 공장 직원들에게 “푸 양말도 있는가?” 하고 물었으며 ‘푸 양말도 있다’고 대답한 직원에게 김 黨 제1비서는 “푸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으니 설명해주라”고 지시했고, 직원은 “푸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만화영화의 주인공인 꼬마곰 인형”이라고 소개함.

- 노동당 중앙위원회, 4월 6일 ‘아랍사회부흥당’ 앞으로 당 창건 68주년 축전(4.6, 중앙통신·중앙방송)
- 주북 무관단, 4월 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4.9) 22주년과 김정은 당 제1비서 추대(4.11) 3주년을 즈음하여 김정은에게 꽃바구니와 축하편지 전달(4.6, 중앙통신)
- 최근 일본의 군사대국화 박차(3.26,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의 초정밀 정보수집 위성 ‘광학5호기’ 탑재 H2A 로켓 발사·3.25, 해상자위대 구축함 ‘이즈모함’ 취역 등)는 “군국화와 조선반도 재침야망에 환장한 자들의 군사적 망동”이라고 비난(4.7, 중앙통신·민주조선)
- 최태복(黨 비서), 4월 7일 新任 주북 시리아 대사(타맘 술레이만)와 담화(4.7, 중앙통신·중앙방송)
- 남승우 「총련」 부의장 등(강추련 「총련」 부의장 겸 재일본 「여맹」 위원장) 「총련」 대의원들, 4월 7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3차 회의 (※ 4월 9일 예고) 참가 위해 평양 도착 (4.7, 중앙통신)
- 김정은 저작 발표 3주년을 맞아 ‘지난 3년간은 장군님의 사상과 업적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나가려는 당의 의지가 힘있게 과시된 나날이었다’며 ‘모든 일꾼들은 김정은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김정일을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모시고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일떠세워야 한다’고 강조(4.6, 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정은 ‘黨 제1비서(4.11)·국방위원회 제1위원장(4.13)’ 추대 3주년 경축 중앙사진전람회 <인민의 아버지> 개막식, 4월 7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최태복(黨 비서)·김용진(내각 부총리)·박춘남(문화상/개막사) 등 참석한 가운데 진행(4.7, 중앙방송·중앙통신)

- 김일성·김정일의 인도네시아 방문 50주년 기념 영화감상회, 4월 7일 대동문영화관에서 김정숙·서호원(대외문화연락처 위원장·부위원장)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4.7, 중앙통신·중앙방송) 김일성의 ‘반제자주역량의 단결과 위력을 강화 발전시킨 공헌 및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인민들의 단결강화 업적’ 칭송 및 ‘反帝·사회주의 옹호투쟁’ 강조 (4.7, 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정은 黨 제1비서, 4월 8일 비전향장기수 ‘석용화’의 90회 생일상 전달(4.8, 중앙통신·중앙방송)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제453호·제454호, 4월 8일 공로자들(동정호·최호식-김일성훈장, 김분선-김일성상)에게 김일성훈장 및 김일성상 수여(4.8, 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4.11)·국방총 제1위원장(4.13)’ 추대 3주년 즈음 청년학생들과 ‘여맹 일꾼·여맹 원들’ 경축모임, 4월 10일 최룡해(黨 비서)·전용남(청년동맹 위원장)·김정순(‘여맹’ 위원장) 등 참가한 가운데 각각 진행(4.10, 중앙방송)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제409호(3.25字), 평안북도 창성군에 “모범지방공업군” 칭호 수여(4.10, 중앙방송)
-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3차 회의 참가 대의원들, 4월 10일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평양 버섯공장 참관 및 인민극장에서 예술공연 ‘추억의 노래’ 관람(4.10, 중앙통신·중앙방송)
- 제4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개막식, 4월 11일 동평양대극장에서 진행(4.11, 중앙통신)

## 4. 경제

### 가. 정책 동향

- 북한 포전담당제는 사실상 ‘가족 중심 영농제’(4/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7일 평안북도 선천군 석화협동농장의 작년 성과를 소개하면서 “기본 생산단위인 분조들을 한집안 식구들이 함께 일하는 것을 위주로 재구성했다”고 밝힘.
  - 이 신문은 “필지별로 부침조건이 각이한 포전들을 공명정대하게 분담하는 사업도 포전담당책임제에 대한 당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보았다”고 설명함.
  - 신문은 영농방식뿐 아니라 변화한 분배제도도 강조하면서 “가령 어느 강내가 품종을 심는다면 한 평당 15포기가 들어가는데 그중 10포기는 분배뭉이고 나머지가 수매뭉이 된다는 식으로 알기 쉽게 인식시켰다”고 밝힘.

## 나. 주요 조치

- 북한 “개성으로 관광오세요”…관광 활성화 나서(4/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6일 “본격적인 관광계절이 시작되는 4월에 들어서면서 역사문화도시 개성에 대한 관광이 더욱 활성화된다”며 버스노선 확충 소식과 주요 관광상품 등을 소개함.
  - 국가관광총국 관계자는 중앙통신과 인터뷰에서 개성을 찾는 국내 관광객도 많이 늘어났으며 정전협정 조인장, 고려박물관, 기타 개성시내 고적 등이 주요 방문지라고 밝혔다고 통신은 전함.
  
- 북한, 전력난에 전시예비 기관차 투입(4/7,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전력난으로 마비되다시피한 열차 운행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시 예비물자인 내연기관차를 투입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보도함.
  - 평양 주민 소식통들은 “올해 2월부터 평양과 함경북도 무산, 평양과 두만강역을 연결하는 철도 노선에 내연기관차가 투입돼 운행중”이라며 “이전에는 운행 시간이 10~20일 걸리던 것이 2일 정도로 크게 단축됐다”고 전함.
  - 소식통들은 “투입된 내연기관차들은 모두 전시 예비물자로 비축해 놓은 것으로 평시에 노선에 투입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고 방송은 전함.
  
- 북한 신문, 간부들 ‘공개 비판’…나무심기 외면 집중 성토(4/1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1일 ‘산림복구 전투성과는 총동원, 총집중에 달려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황해북도 서흥군과 강원도 창도군이 봄철 나무심기 사업 목표를 채우지 못했다고 질책함.
  - 기사는 부제도 ‘3월중 나무심기에서의 성과와 교훈을 놓고’라고 달고 군 간부들이 나무심기를 외면하는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문제점과 원인을 나열함.
  - 신문은 서흥군이 산하 산림경영소의 일부 노동력을 전혀 다른 분야인 건설에 투입하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산림복구에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집중할 데 대한 당정책을 걸써(대충) 대했다”고 비판함.
  - 창도군 역시 산림집 건설에 대부분 인력을 투입하는 바람에 나무심기 시기를 놓쳤다면 “일꾼들이 산림복구에 노력(노동력)을 집중하기만 했어도 애써 키

워 심은 아까운 나무들이 죽는 가슴 아픈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런 현상이 “단순히 노동력 관리에서 나타난 실무적인 결함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당정책을 말로만 접수하고 패배주의의 한숨을 쉬면서 보신주의 울타리를 친 결과”라고 비난함.

■ 북한, 유적지 집중 정비…관광사업 포석(4/11,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1일 평양시가 봄철에 들어 구역별로 ‘비상설 민족유산보호위원회’(이하 민족유산보호위)를 정비하고 역사적인 유적과 명승지 등에 대한 관리사업에 나섰다”고 전함.
- 만경대구역 민족유산보호위의 경우 고구려 시기의 성인 서산성의 복구사업을 7년 만에 재개해 300m 구간을 복구하고 잔디 입히기 등의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으며, 장철구평양상업종합대학 인근의 평양성 외성은 1천m가량에 걸쳐 훼손되고 무너진 부분을 복구해 현재 성토와 돌 쌓기, 잔디 입히기를 하는 중이라고 신문은 전함.
- 평양시는 이 밖에도 대성산성, 고방산성, 낙랑토성, 강동옛읍성, 대화궁성 등의 옛성과 순안구역의 무학산·독자산 및 강동군 봉화산의 봉수를 복구하고 주변 경관을 위해 잔디, 나무, 화초를 심고 있음.

#### 다. 경제 상황

■ “식량시정 좋아졌다”…북한, 학교서 요리수업 실시(4/7,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7일 “과거에는 요리 기술을 여학생들만이 배웠지만 지금은 남학생들도 함께 배운다”며 북한의 고급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요리 수업을 받고 있다고 전함.
- 학생들은 수업에서 다매체편집물(CD, DVD 등 멀티미디어 매체)을 통해 다양한 요리의 조리법과 함께 식감의 특성, 요리의 역사와 유래 등 각종 요리 관련 상식을 배우고 있다고 전함.
- 신문은 또 ‘장철구평양상업대학’이 ‘장철구평양상업종합대학’으로 이름을 바꾸고 요리사 교육을 위한 새로운 시설을 갖추게 된 소식도 소개함.

- “평양서 사치생활 즐기는 엘리트 최대 100만명”(4/8, 자유아시아방송)
  - 박성조 독일 베를린자유대 교수는 8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당과 군부, 국영기업 간부 등 엘리트들이 평양 창전거리 등 고급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며 주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치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함.
  - 박 교수는 이들은 적어도 미화 5만달러 이상을 보유한 신흥 부자로, 한국의 삼성 텔레비전을 갖고 있고 중국에서 밀수한 에어컨을 키우는가 하면 달리화나 유료화 등만 취급하는 값비싼 식당, 사우나, 체육관 등을 이용한다고 설명함.
  - 박 교수는 평양에 벤츠나 BMW 등 고급 외제승용차가 5천여대 있고 일본 닛산 등 중고 자동차도 1천500여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평양 시내 택시도 1천여대에 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차가 막히는 경우도 있다고 전함.
  
- 북한 식량난 지속…국제사회 지원은 계속 줄어(4/10, 연합뉴스)
  - 9일(현지시간) 유엔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전체 인구 2천462만 명 가운데 70% 정도에 해당하는 1천800만 명이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식량이나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10일 전함.
  - 따라 유엔은 북한의 식량난과 보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개년 계획을 세워둔 상태이나 국제사회의 지원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며 관계자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 지원이 어려워지는 것은 주로 국제사회가 북한에 취한 제재의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함.

## 라. 대외 경제 관계

- 중국, 두만강 국경지역 관광객 비자 면제 추진(4/9, 자유아시아방송)
  - 최근 북한, 러시아와 손잡고 두만강 하구 국제관광합작구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중국 지린(吉林)성이 변경지역 관광시 비자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성 정부 홈페이지를 인용해 9일 보도함.
  - 지린성은 회의에서 북한, 러시아 변경지역에서 72시간 동안 비자 없이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얻는 데 주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또 수출입세금환급 정책도 적용되도록 노력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짐.

- “북한, 러시아 극동지역 파견 노동력 대폭 늘릴 계획”(4/11, 연합뉴스)
  -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에 노동력을 파견하는 북한이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노동력 파견을 농업 분야 등으로 크게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11일 보도함.
  - 11일(현지시간) 러시아 극동개발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막심 세레이킨 극동개발부 차관은 최근 현지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러시아에 노동력을 무제한으로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힘.
  - 그는 지금까지 주로 임업 분야에 노동력을 파견해온 북한이 농업 분야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소개함.
  - 세레이킨 차관은 “북한 노동자는 임금이 쌀 뿐만 아니라 규율이 잘 잡혀 있고 북한 당국의 관리를 받고 있어 통제가 쉽다”면서 중국 노동력을 대체할 방안으로 북한 노동자들을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함.

- 평북종합대학 농업대학에서 ‘토양산도측정기(간단한 방법의 토양 pH값 측정)’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휴대용 측정기구들 개발’ 선전(4.7, 중앙통신)

## 5. 사회

###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특이사항 없음.

####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 마. 사회 동향

- 북한 고아원 교육사업에 국제단체 지원 활발(4/6,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6일 북한 교육지원 단체인 조선교육후원기금이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외국 단체 5곳으로부터 인적·물적 지원을 받아 고아원에 제공했다고 전함.
  - 기금은 올해 2월 국제하나사랑재단으로부터 기증받은 아동용 겨울 솜옷 8천900벌을 각도의 애육원과 초등·중등학교에 지급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신세기무역회사와 협력해 평안남도 평성중등학교에 목공실습 및 운전실습 설비를 후원함.
  - 지난해 12월에는 신세기무역회사와 협력해 평안남도 평성중등학교에 목공실습 및 운전실습 설비를 후원했다. 또 우리아이인터내셔널 등의 도움을 받아 남포온천초등학교에 식당을 마련했으며 작년 11월에는 선양하나재단이 기증한 책가방을 비롯한 학용품과 생활용품을 각도 고아원에 분배했다고 뉴스는 전함.
- 북한, 학교에 각종 전자장비 설치…다기능교실 추진(4/7,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7일 ‘모든 교실을 다기능 교실로’란 제목의 기사에서 “전국의 소학교, 초급 및 고급중학교와 대학의 교실을 다기능화된 교실로 전환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힘.
  - 이에 따라 김일성종합대학에 컴퓨터, TV, 투영기, 전자칠판, 평양 제1중학교에는 과학 실습장비, 승리고급중학교와 긴재초급중학교에는 TV와 연결된 미니 PC 등이 설치됐음.
  - 이번 사업은 일부 본보기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됐으며 추후 일반 학교로 확산할

방침이라고 조선신보는 전함.

■ 끊이지 않는 북한 외교관들의 주류 판매(4/7, 미국의 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6일 파키스탄 주재 북한 외교관 부부가 지난 1일 파키스탄 최대 도시인 카라치에서 불법 주류 밀매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고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7일 보도함.
- 이 방송에 따르면 북한 외교관 부부는 카라치의 대규모 주택단지에서 현지인들에게 시바스리걸 등의 위스키를 팔다 목격자의 신고로 당국의 조사를 받았으나 외교관 면책 특권으로 기소되지 않고 풀려났다고 함.
- 북한 외교관들이 중동에서 주류 밀매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는 종종 있으며 북한 외교관들이 이처럼 주류 판매에 목을 매는 것은 경제난으로 대사관 운영비와 월급 등 모든 것을 자체로 충당해야 하는 현실 때문이라고 탈북 외교관들이 설명했다고 방송은 전함.

■ 알록달록해진 북한 교복…여학생은 자주색(4/7, 조선신보, 연합뉴스)

- 조선신보는 7일 “새 학년도 개교식을 맞은 북한의 소학교 신입생들에게 새 교복과 학용품이 공급됐다”고 보도함.
-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겨울 교복은 양복 형태이며, 여름 교복은 남학생의 경우 여름 셔츠와 반바지, 여학생의 경우 셔츠, 치마, 양말 바지로 구성돼 있으며 소학교 학생들의 착용 사진을 보면 새 교복은 남녀 구분없이 ‘검은 감색’으로 통일돼 다소 촌스럽던 기존 교복보다 색이 다양해지고 밝아졌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 이번에 지급된 새 교복의 디자인은 국가산업미술지도국, 식료일용공업성 피복연구소, 평양미술대학 등으로부터 후보작을 받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선신보는 “새 교복은 시대적 미감과 생기발랄한 청년 학생들의 체모(모양새)를 한층 더 부각시켜주게 될 것”이라고 평함.

■ 북한서도 ‘핸드드립’ 커피점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4/7,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7일 ‘대동강 풍치를 보면서 맛좋은 커피를’이라는 제목의 평양발 기사에서 평양호텔의 ‘전망대 커피점’을 소개함.
- 1961년 개장해 170개 객실을 보유한 평양호텔의 5층 전망대에 위치한 커피점은

북한의 첫 핸드드립 커피 전문점으로 유명하다.

- 커피점의 대표 메뉴인 핸드드립 커피와 커피 원액을 물에 희석해 마시는 더치 커피는 물론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 카푸치노, 비엔나커피가 손님들이 가장 즐겨 찾는 메뉴라고 소개함.
- 조선신보는 “커피점이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면서 “호텔을 이용하는 재일동포들 중에서도 단골이 많다”고 설명함.

■ 북한, 유엔서 ‘불활성 소아마비 백신’ 받아 접종행사(4/8, 연합뉴스)

- 북한은 8일 유엔아동기금(UNICEF)과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비동화(불활성) 소아마비 예방약'을 지원받아 평양서 접종행사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이날 행사는 김형훈 보건성 부상과 함께 티모티 샤프터 북한 주재 UNICEF 대표, 스테판 파울 조스트 북한 주재 WHO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렸으며 행사에서 연설자들은 북한의 소아마비 근절 활동 노력을 언급했다고 통신은 소개함.

■ 북한 마라톤대회에 외국인 650명 참가…작년의 3배(4/12, 교도통신)

- 북한이 올해 평양에서 주최한 국제마라톤대회에 예상보다 훨씬 많은 650명 규모의 외국인 선수들이 참가했다고 교도통신이 12일 보도함.
-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103번째 생일인 '태양절'(4월15일)을 기념해 12일 평양에서 개최한 마라톤경기대회에는 30여 개국에서 650명의 외국인 아마추어 마라톤선수들이 참여함.
- 마라톤은 42.195km의 풀코스과 10km 하프코스로 나뉘어 치러졌으며 선수들은 코스에 따라 작년과 마찬가지로 50~100달러의 참가비를 내야 함.

- 「세계보건의 날(4.7)」 행사, 4월 7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및 각 道에서 ‘집중위생선전’도 진행 (4.7, 중앙통신·중앙방송)
- 올해 대학졸업생들의 외진 성과 산골마을 학교 교원으로 자원진출 소행 보도(4.7, 중앙통신)
- 북한 심판, 6월 캐나다 여자월드컵 주심에 선정(4.9, 자유아시아방송)
- 北, 봄철 나무심기가 더욱 활기있게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4.12, 중앙통신)

© 북한연구실 제공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이란 핵협상, 6자회담 자극제 될수도…北 진정성 보여야(4/7, 연합뉴스)
  -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6일(현지시간) 미국 주도의 이란 핵협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후속협상이 잘 진행돼 최종 타결 되면 이는 6자회담이 다시 굴러가게 하는 자극제가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음.
  - 그는 다만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아직은 북한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있다’는 어떤 징후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음.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였던 힐 전 차관보(덴버대 조세프 코벨 국제대학 학장)는 이날 워싱턴DC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열린 자신의 회고록 ‘전초기지(OUTPOST): 미국 외교 최전방의 삶’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힘.
  - 힐 전 차관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다른 많은 이슈에 손이 묶여 있고 또 이들 이슈 중 일부는 북핵보다 더 전망이 밝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북한이 2005년 ‘9·19 공동성명’으로 돌아갈 진정성을 보인다면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언제든지 대화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 남북, 유엔서 핵 문제 놓고 공방전 벌여(4/9, 연합뉴스)
  - 남북한이 유엔 군축위원회에서 북한 핵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9일 보도함.
  - 한국은 지난 7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군축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핵 포기 및 비핵화 협상 복귀를 촉구한 반면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억제 수단으로 핵무기를 보유 중이라고 주장하는 한국과 정면으로 부딪힘.
  - 백지아 한국 유엔대표부 차석대사는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이 국제 비확산 체제의 초석임을 강조하고 이란과 서방 6개국 이 핵 협상에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힘. 그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개발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이

진지한 태도로 비핵화에 임하면서 의미 있는 대화에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음.

- 이에 대해 안명훈 북한 유엔대표부 차석대사는 반론권을 얻어 “한국과 미국이 합동군사훈련을 통해 대북 적대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백 차석대사는 외면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라는 외부 조건에 대한 억제 수단으로 핵무기를 보유 중이며 적대 정책이 계속되는 한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함.

■ 북한, 중단거리 미사일에 핵탄두 탑재 능력 갖춰(4/9, 연합뉴스)

- 북한이 핵무기 개발 후발국이지만 중단거리인 노동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소형화된 핵탄두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분석이 나왔음.
-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연구학회 춘계학술회의 발표에 하루 앞서 9일 공개한 자료에서 “북한은 핵실험 이전에 자주적인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초기 개발단계부터 소형화된 탄두를 목표로 했다”며 이같이 평가했으며, “북한과 같이 중등 이상 수준의 과학기술력을 가진 국가는 후발국의 우세 등을 활용해 최초 핵실험에서 미사일 탄두개발까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며 “수평궤도 핵실험을 통해 기술과 장치를 검증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음.
- 윌리엄 고트니 미군 북부사령관도 지난 7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KN-08을 실전 배치했고 핵무기를 이 미사일의 탄두에 장착할 정도로 소형화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힘.

## 나. 미·북 관계

■ 美북부사령관 북,이동식 ICBM 배치·핵무기 소형화(4/8, 연합뉴스)

- 북한이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KN-08을 배치했고 핵무기를 이 미사일의 탄두에 장착할 정도로 소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윌리엄 고트니 미군 북부사령관이 밝혔음.
- 고트니 사령관은 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수준에 대한 질문에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과정에

대해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음.

-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KN-08 미사일에 장착해 (미국) 본토로 발사할 능력을 갖췄다는 게 우리의 평가”라며 “아직 그들이 KN-08을 시험(발사)하는 것을 목격하지 않았고, 우리는 그것(발사 시험)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임.

■ 미 국무부 차관보 사드, 北미사일 대처할 결정적 역량(4/8, 연합뉴스)

- 프랭크 로즈 미국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는 7일(현지시간) “현재 한·미 양국 사이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그러나 앞으로 협상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북한의 노동 또는 스커드 미사일에 대처하는 결정적 역량(critical capabilities)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로즈 차관보는 이날 미국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미사일 방어:다음 수준은’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한 자리에서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함.
- 이 같은 언급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를 반드시 한반도에 배치하겠다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됨.

■ 북한, 미국인 활동가 ‘산드라 서’ 추방…17년간 모략행위(4/8, 연합뉴스)

- 북한은 8일 지난 17년간 대북지원 활동을 해온 미국인 ‘산드라 서’씨를 ‘모략·선전 행위’로 추방을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중앙통신은 서씨가 “근 20년 동안 ‘무상기증’의 명목으로 조국(북한)에 드나들면서 반공화국 모략·선전 행위에 가담했다”면서 관계기관이 서씨를 조사한 결과 이런 혐의를 밝혀냈다고 보도함.
- 서씨는 1998년부터 북한에서 인도주의 활동을 하면서 ‘은밀한 방법’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제작·연출해 북한을 모략하는 데 이용한 혐의임. 중앙통신은 서씨가 이에 대해 “공화국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공화국법을 위반한 짓을 수 없는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죄하였다”며 용서를 구했다고 전함.
- 이어 조사 기관은 “공화국법의 관대성과 산드라 서의 연령상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그를 공화국 경내에서 추방하기로 했다”고 밝힘.

■ 카터 美국방 “천안함, 北 위협 보여주는 상징”(4/10, 연합뉴스)

- 한국을 방문 중인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10일 한민구 국방장관을 만나

- 천안함 사건이 한미동맹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 카터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한 장관과 회담을 하기 직전 모두 발언에서 “오후에 있을 천안함 추모지(평택 2함대사령부) 방문을 기대한다”며 “그곳은 우리의 동맹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상기시켜주는 장소”라고 밝혔다.
- 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과 핵심 군사능력 확보, 세계 안보에 대한 (한국 의) 지원과 협력에 감사한다”고 언급했으며, 모두 발언 끝에 한국어로 “같이 갑시다” 라고 말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했다.

■ 북한 추방 산드라 서씨, 매년 200만 달러 물자지원(4/11, 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모략·선전행위’ 혐의로 추방한 미국인 산드라 서씨는 지난 25년간 해마다 2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 활동을 해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보도했다.
- 서씨와 함께 대북지원 활동을 해온 최재영 목사는 지난 9일 RFA와 인터뷰에서 “서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대북지원 사업의 대모 격”이라면서 “의약품이나 의료 기기, 신발, 식량 등을 보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또다른 제보자는 서 씨에 대해 “북한에 기근이 심할 때는 평양과 황해도에서 국수공장을 운영하고 미국 자선 기관의 도움으로 고가의 의약품 등을 북한에 다량 지원해 왔다”고 소개했다.
- 한편, 서씨는 북한에 장애인 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미국 내 한인 목사들을 모아 방북을 주선하기도 했으며, 낡은 카펫을 모아 북한 보육원에 깔아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1994년 타결 北핵협상 파기, 북한·미국 모두의 잘못(4/12, 연합뉴스)

- 제네바 합의를 끌어낸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특사와 미국 국무부 북한담당관으로서 제네바 합의와 이행 과정에 관여했던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연구원은 11일(현지시간) 미국의 일간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북한 핵협상이 이란에 미치는 교훈’이라는 글에서 제네바 합의가 깨진 것은 북한과 미국 모두에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 우선 제네바 합의는 깨졌지만 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두 사람은 강조했다. 제네바 합의 직전인 1990년대 초 만해도 북한이 1990년대 말에 이르면 핵무기 30개를 만들 것이라는 공포와 우려가 확산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북한 핵능력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는 제네바 합의로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이 일정 정도 ‘제동이 걸린’ 덕분이라는게 두 사람의 설명이며,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깬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지만 미국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잘못했다고 지적했음.

- 우선 미국은 제네바 합의 당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면 북한과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대북 경제 제재를 해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임. 이는 핵협상 타결도 중요하지만 합의 내용이 지속하려면 후속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음.

#### 다. 중·북 관계

- 북한 첫 외자유치기구 베이징 ‘조선투자사무소’ 폐업상태(4/8, 연합뉴스)
  - 북한당국이 외자 유치를 목표로 2010년 여름 중국의 수도 베이징(北京)에 처음 설치했던 조선투자사무소가 사실상 폐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됨.
  - 조선투자사무소는 북한정부가 운영해온 고려궁 국제회관(3층 규모의 상가) 내에 있음. 건물 모퉁이에 사무소가 있고, 차도와 맞닿은 측면 입구 쪽에 고려궁이라는 비즈니스전용 식당, 호텔이 있지만, 현재 출입구 앞에 ‘내부수리 중’이라는 문구가 걸려 있고, 가구 하나 보이지 않아 영업재개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임.
  - 조선투자사무소는 북한이 해외에 설치한 첫 외자유치 기구로 잘 알려져 있음. 이 사무소는 리수용 현 외무상이 한때 위원장을 맡아 운영했던 북한의 외자유치 총괄기구인 합영투자위원회의 베이징사무소로, 2010년 7월 설치되었으나, 북한의 제3차 핵실험 뒤 북중 관계가 급랭하면서 사실상 장기간 ‘개점휴업’ 상태에 빠짐.
- 중국, 두만강 국경지역 관광객 비자 면제 추진(4/9, 연합뉴스)
  - 최근 북한, 러시아와 손잡고 두만강 하구 국제관광합작구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중국 지린(吉林)성이 변경지역 관광시 비자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임.
  - 지린성 정부는 지난 1일 변경관광 현장회의를 열고 두만강 하구 국제관광합작구 건설을 가속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성 정부 홈

페이지를 인용해 9일 보도함.

- 지린성은 회의에서 북한, 러시아 변경지역에서 72시간 동안 비자 없이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얻는 데 주력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또 수출입세금환급 정책도 적용되도록 노력하기로 함. 지린성은 특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핵심 정책중 하나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구상을 변경관광 활성화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음.

## 라. 일·북 관계

- 조선총련 입수수색, 대사 가택수색과 마찬가지로(4/11, 연합뉴스)
  - 인도네시아 초대 대통령의 부인인 라트나 사리 데비 수카르노 여사는 일본 경찰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의장·부의장 가택수색에 대해 ‘무례한 행위’ 라고 비난했음.
  - 스카르노 여사는 11일 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조선총련은 북일간 국교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대사관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번 강제수색은 대사와 공사의 가택수색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무례한 행위”라고 주장함. “강제수색으로 북일 당국은 대화를 지속하느냐 하는 기로에 놓여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일본인이 북한을 방문해 현지인과 접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일본의 ‘데비 수카르노 사무소’ 소장인 수카르노 여사는 이달 중순 평양에서 열리는 제17차 김일성화축전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9일 방북했음. 그는 김일성화 축전의 김일성화·김정일화 보급후원회 명예회장을 맡고 있음.
- 일본 방위상 “북한 핵 탄두화 가능성 배제 못해”(4/11, 연합뉴스)
  -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10일 북한이 핵무기를 탄두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음.
  -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날 기자들에게 윌리엄 고트니 미군 북부사령관이 최근 북한이 소형화한 핵무기를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KN-08에 탑재할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음.
  - 특히 그는 북한의 핵개발 능력에 대해 “탄두화, 소형화에 성공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힘.

## 마. 러·북 관계

- 러 외무차관, 모스크바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아직 없어(4/8, 연합뉴스)
  -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다음 달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행사에서 남북한 지도자가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은 아직 없다고 러시아 외무부 고위인사가 밝힘.
  - 이고리 모르굴로프 외무부 아태담당 차관은 이날 ‘러시아가 5월 행사에서 남북한 정상 간 만남을 주선할 계획인가’라는 리아노보스티 통신의 질문에 “한국 측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에 관한) 답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얘기하기는 이르다”고 말했음. 모르굴로프 차관은 그러면서 “아직 한국 측으로부터 대통령이 행사에 참석하겠다는 답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음.
  - 크렘린궁은 앞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승전 기념행사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전달해왔다고 확인한 바 있음. 외교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 측에 박 대통령의 승전 기념행사 참석을 요청했지만 현재로서는 참석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보고 있음.
  
- 김정은 방러 앞두고 북한 부총리 내주 모스크바 방문(4/10, 연합뉴스)
  - 북한의 로두철 내각 부총리가 오는 13일부터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한다고 현지 외교 소식통이 전했음.
  - 로 부총리의 방문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다음 달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루어져 주목됨. 로 부총리의 공식 방문 목적은 앞서 러시아와 북한이 선포한 양국 친선의 해 행사 참석으로 알려졌다.
  - 소식통은 10일(현지시간) “로 부총리가 궁석웅 외무성 부상과 함께 13일 모스크바에 도착해 14일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 겸 극동연방지구 대통령 전권대표 등 러시아 정부 인사들과 만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소개했음.

- 북한, 러시아 극동지역 파견 노동력 대폭 늘릴 계획(4/11, 연합뉴스)
  -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에 노동력을 파견하는 북한이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노동력 파견을 농업 분야 등으로 크게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극동개발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막심 세레이킨 극동개발부 차관은 최근 현지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러시아에 노동력을 무제한으로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 그는 지금까지 주로 임업 분야에 노동력을 파견해온 북한이 농업 분야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소개했음.
  - 북한이 러시아 측과의 경제협력 논의과정에서 조건만 맞으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노동력을 농업 분야 등으로 확대해 파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의미로 해석됨.

## 바. 기타

- 유엔, 멕시코 억류 북한 선박 유엔 제재대상 맞다(4/10, 연합뉴스)
  - 유엔은 북한이 멕시코에 억류된 선박 ‘무두봉 호’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제재대상인 북한 해운회사 소속이 맞다고 반박했음.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0일 휴 그리피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위원회 전문가단 위원장이 “무두봉호가 지난해 7월 유엔 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북한의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함.
  - 그리피스 위원장은 “(원양해운관리회사에 대한) 유엔 제재가 확정된 이후 무두봉 호가 소속 선박의 이름을 바꿔 제재를 피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단은 그러면서 무두봉호와 원양해운관리회사가 무관하다는 북한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 자료를 제시함.

## 2. 주변국 관련

### 가. 한·미 관계

- 과거사 대치 한일 안보협력 복원 움직임…미국 적극 중재?(4/6, 연합뉴스)
  - ‘과거사’를 둘러싼 대치 국면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한·미·일 3자 형태로 안보 협력을 복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올 상반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을 잇따라 워싱턴으로 초청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이 과정에서 한·일 양국을 상대로 적극적인 중재 시도를 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5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 외교 소식통 들에 따르면 한·미·일 3국은 이달 중순 워싱턴DC에서 국방 분야와 외교 분야 회담을 잇따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국방 분야에서는 3국 차관보급 관료들이 16일부터 이틀간 ‘3자 안보토의(DTT)’를 가질 예정임.
  - 이와 관련, 미국 당국자들은 지난달 아베 총리가 워싱턴 포스트(WP)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 대체로 긍정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리면서 3국간 안보협력을 독려하는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특히 미국 당국자들을 일본 측을 상대로 좀 더 명확한 사과와 반성을 표명하라고 촉구하는 한편으로, 한국에도 과거사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안보협력 복원에 적극 응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음.
- 세계대전 한복판에 놓인 한일 관계…TPP가 해법(4/6, 연합뉴스)
  - 한일 관계가 마치 세계대전의 한복판에 놓인 것처럼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지적함. WP는 5일(현지시간) 프레드 하이아트 논설실장 명의로 인터넷판에 올린 ‘전쟁의 망령이 한국과 일본의 미래에 그림자를 드리운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아시아 전문가들의 진단을 인용해 이같이 우려했음.
  - 사설에 따르면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마이클 오슬린 연구원은 최근 “한국과 일본 사이의 긴장이 역대 최고”라고 평함. 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상황이 얼마나 더 나빠질지 확실할 수 없다”며 “그런 상황이 두 나라는 물론 미국에도 해를 끼칠 것”이라고 진단하였음. AEI의 니컬러스 에버슈타트 연구원은 “지금 이 1,2차 세계대전 사이인지, 아니면 전후 시기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나”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고 WP는 전했다.

- 한편,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각각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지만 각자 미국과의 양자 관계 개선에만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했음.
- 랭글 아베, 방미기간 ‘위안부’ 언급 피할수 없을 것(4/7, 연합뉴스)
  - 최근 하원 대표단의 일원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찰스 랭글(민주·뉴욕) 하원의원은 6일(현지시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달 말 미국을 방문하는 기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언급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힘.
  -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으로 대표적 지한파 의원으로 꼽히는 랭글 의원은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위안부 문제가 제기된 만큼 답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아베 총리가 지난달 말 워싱턴 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의 희생자”라고 표현하고 “측량 할 수 없는 고통과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을 겪은 이들을 생각할 때 가슴이 아프다”고 언급한 이후 방미기간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할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음.
- 미 전문가, 한반도 사드 배치되면 미 육군 역할 증대(4/8, 연합뉴스)
  - 미국이 한국에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배치하면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 육군의 역할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음.
  - 비영리기관인 텍싱턴연구소의 로렌 톰슨 최고운영책임자(COO)는 6일(현지시간) 포브스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이 동아시아지역에서 육군의 역할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 첫 번째 증거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라고 주장함. 그는 사드의 사거리가 최대 125마일이라면서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북한이 한국을, 특히 주한미군을 공격하는 것을 방어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며 또 “북한이 일본을 공격하는 것을 방어하는 데도 좋을 것”으로 전망했음.
  - 현재 미국은 한국에 주둔하는 2만9천 명을 제외하면 동아시아지역에는 육군을 배치하지 않고, 해군과 공군의 군사력을 강화해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유지해 왔음.

-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미·미일동맹, 제로섬 아닌 보완관계(4/9, 연합뉴스)
  - 윤 장관은 이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유엔 개발협력포럼(DCF) 고위급 심포지엄 참석 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미일이 밀착하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 지난 2월말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에 이어 최근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전날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의 발언을 두고 미국이 한일간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을 두둔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되며, 또 미일이 가까워진다고 한미동맹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보임.
  - 윤 장관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관계를 제로섬으로 보는 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이라면서 “서로 보완될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너무 제로섬으로 보니까 자꾸 그런 오해들이 생기는 것 같다”면서 “제로섬 시각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음.
  
- 카터 美국방 오늘 첫 방한…北, KN-06 2발 발사(4/9, 연합뉴스)
  -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방한 일정을 시작함. 그는 오산 공군기지에서 주한미군 장병과 타운홀 미팅을 하고 기지 내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 등 주요 시설도 둘러볼 것으로 알려졌다.
  - 그는 10일에는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할 예정으로, 한미 국방장관회담의 공식 의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처 방안,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후속 조치 등이지만 첨예한 논란거리인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관한 언급도 예상된다.
  - 한 장관과 카터 장관이 회담 직후 가질 예정인 내외신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사드 배치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임. 북한은 카터 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지난 7일 평안남도 화진리 일대에서 ‘북한식 패트리엇 미사일’로 불리는 KN-06 단거리 지대공미사일 2발을 시험발사한 것으로 알려짐.
  
- 한·미 ‘北핵탄두 소형화·KN-08 실전배치’ 평가 논란(4/9, 연합뉴스)
  - 북한이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KN-08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소형화에 성공하고 이를 실전 배치했는지를 놓고 한·미 양국 사이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

- 미국 국방부 당국자는 8일(이하 현지시간) 북한이 KN-08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윌리엄 고트니 미군 북부사령관의 공개 발언과 관련한 연합뉴스의 확인 요청에 “우리는 고트니 사령관의 발언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 고트니 사령관은 전날 미국 국방부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 하는데 성공했고 KN-08 미사일에 장착해 미 본토로 발사할 능력이 있다는 게 우리의 평가”라고 밝혔다. 또 미국 성조지는 고트니 사령관이 “KN-08은 현재 가동중(operational)”이라며 “우리는 이에 맞서 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음. 이는 KN-08이 실전 배치됐다는 근거가 없고 현재 개발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우리 군의 평가와는 다른 것임.

■ 한미일 외교차관 16일 회담…과거사 논의 주목(4/10, 연합뉴스)

- 한·미·일 3국의 외교차관이 이달 1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외교차관 협의회를 갖고 3국 협력 방안을 협의한다고 외교부가 10일 밝혔다.
-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16일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3국 외교차관 협의회를 가질 예정이며,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북핵 문제 등 한반도 차원, 대중관계와 지역 정세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차원, 그리고 범세계적 현안 차원에서의 3국 협력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는 전했다.
- 이번 회담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이달 말 방미, 특히 29일 이뤄질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을 앞두고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됨. 우리 정부는 아베 총리의 연설에 주변국에 대한 식민지배 및 침략에 대한 사죄, 군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 인정 등 과거 일본 정부가 공식 인정한 과거사 관련 입장과 상통하는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임.

■ 한·미 공군, 연합 공중종합훈련 ‘맥스선더’ 실시(4/10, 연합뉴스)

- 공군은 미국 공군과 함께 연합 공중종합훈련인 ‘맥스선더’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24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한미 연합작전 능력 향상을 위한 것으로, 한반도 전역에 걸친 공역에서 실시됨.
- 이번 훈련에는 한미 양측의 항공기 100여대와 장병 1천400여명이 참가함. 이는

작년 4월 맥스선더 훈련과 비슷한 규모임. 특히 이번 훈련에는 국산전투기 FA-50이 처음으로 투입돼 한미 연합작전 임무를 수행하게 됨.

- 맥스선더 훈련은 미 공군의 ‘레드 플래그’ 훈련을 본떠 2009년 처음 실시된 한미 연합훈련으로, 해마다 두 차례 정례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전반기 훈련은 한국 측의 주도로, 후반기 훈련은 미국측의 주도로 진행되며 전력을 청군과 홍군으로 나눠 실전을 가정한 방식으로 이뤄짐.

■ 美재무부, 韓에 “외환시장 개입 중단” 압박(4/10, 연합뉴스)

- 미국 재무부가 9일(현지시간) 한국 금융당국에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하라고 압박하고 나서 환율문제를 놓고 한미 간에 미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음.
- 미국 재무부는 이날 공개한 주요 교역국의 경제·환율 정책에 대한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 당국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외환시장) 개입을 상당히 늘린 것 같다”면서 “(미국 재무부가) 이 사안에 관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음.
- 미 재무부는 지난해 4월과 10월에도 한국 정부에 시장이 무질서한 예외적 상황에만 외환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음. 특히 미 재무부는 지난해 10월 “한국 정부 외환시장에 심하게 개입했다”며 주요 20개국(G20)의 수준에 맞춰 외환 시장에 개입한 후 이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미국 정치인들 ‘위안부 할머니책’ 거절…막강 日로비 탓?(4/12, 연합뉴스)

- 우리 정부가 발행한 최초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책자가 미국 정치인들로부터 속속 거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 군 위안부 관련 진실을 알리고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구술기록집 ‘들리나요’를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한글·영문판으로 제작해 배포한다는 정부의 구상도 그 의미가 퇴색될 위기에 놓였음. 위안부 구술집 ‘들리나요’ 영문판의 미주 배포를 담당하는 미국 내 한인 사회적 기업 ‘미디어 조아’의 한지수 대표는 11일(현지시간) “들리나요 영문판을 배포·전달하는 과정에서 적잖은 미국 정치인들이 딱 잘라 책을 거절해 크게 놀라고 있다”고 말했음.
- 한 대표는 “보수적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 상당수는 아예 내놓고 들리나요 영문판을 거절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진보적 성향의 일부 민주당 의원들조차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며 책을 거절했다”고 밝혔음.

- 뉴욕고서전에서 한국인 일본군 위안부 초상화 발견(4/12, 연합뉴스)
  -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간 한국인 위안부의 초상화가 뉴욕에서 발견돼 눈길을 끌고 있음.
  - 지난 9일(현지시간)부터 뉴욕 맨해튼에서 열리는 ‘뉴욕고서전’에는 1944년 미얀마(당시 버마)에서 미국 군인이 그린 것으로 보이는 일본군 포로 초상화집이 전시되었는데, 약 20쪽 분량의 초상화집에는 전쟁포로 6명과 위안부 등 여성 11명의 초상화 18점이 담겼음. 이 가운데 ‘한국인 위안부(Korean Comfort Woman)’라는 제목이 적힌 초상화 1장이 들어 있음.
  - 한국인 고서·고지도 수집가 김태진(50)씨는 1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고서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고서 수집가가 이번 초상화집을 들고 왔다”면서 “우연히 한국인 군 위안부 초상화가 들어 있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음. 이 초상화집은 제목과 작가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형태이나, 미국 군인이 1944년 미얀마에서 그린 것으로 추정됨.
  
- ‘과거사 발언 파문’ 서면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 주미 한국·일본 대사 연쇄 면담 (4/11, 연합뉴스)
  - 한·일 과거사 관련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웬디 서면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10일(이하 현지시간) 안호영 주미 한국대사와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郎) 주미 일본 대사를 잇달아 면담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이는 오는 16일 한·미·일 외교차관 회담을 앞두고 한·일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3국간 안보협력을 견인해내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돼 주목됨. 서면 차관은 이날 오전 안 대사와 약 1시간가량 만나 과거사 문제와 한일관계 개선, 북한 핵문제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소식통들이 전했다.
  - 서면 차관은 당시 “한·중·일 과거사 논쟁이 이해는 하지만 실망스럽다”, “정치 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등의 발언을 했고, 이는 과거사 갈등의 책임이 한·중·일 모두에게 있으며 과거사를 이제 덮고 가자는 취지로 해석돼 국내적으로 큰 파문이 일었음. 서면 차관은 논란이 커지자 안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의도가 그런 것이 아니었다. (한국내 비판 여론을 접하고) 굉장히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 ‘DMZ 도보횡단’ 구상에 미국 전문가들 “취지는 좋지만…”(4/12, 연합뉴스)
  - 글로리아 스타이넘을 비롯한 세계 여성운동가 30여 명이 최근 비무장지대(DMZ)를 도보로 횡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데 대해 미국 워싱턴DC 내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우세해 보임.
  - 남북한 평화와 통일을 촉구한다는 명분과 취지는 좋지만, 현 시점에서 북한 핵과 인권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할뿐더러, 자칫 북한에 정치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와 관련, 리처드 부시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여성운동가들이 행사를 기획한 취지는 좋다”면서도 “그러나 핵과 인권문제 해결이 시급한 한반도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음. 보수 성향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번 행사는 순진한 상징적 제스처”라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적시된 북한 인권상황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선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음.

## 나. 한·중 관계

- 한중 무역 마찰 줄인다…국영무역 지원센터 설립(4/7, 연합뉴스)
  - 한국이 중국과 농수산물 분야 무역 마찰을 줄이기 위해 산둥성 칭다오(靑島)에 국영무역 지원센터를 만들 예정임.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에 따르면 aT 칭다오 사무소는 오는 15일부터 한국 정부를 대표해 ‘국영무역 정보지원센터’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음. 이번 조치는 지난해 중국산 마늘 반송과 같은 사례를 막고자 중국 농산물 공급자와 소통 채널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나왔음.
  - 칭다오에 신설되는 국영무역 정보지원센터는 상담 전용 핫라인을 구축해 중국 전역의 농수산물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입찰 계획, 입찰 공고 후 계약 조건 등에 대한 전화 상담 등을 하며, 국영무역 입찰 공고문의 주요 내용은 중국어로 번역해 중문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으로, 이처럼 한국으로 농수산물 수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해 무역 분쟁 소지를 없앤다는 복안임.

- 중국, 김장수 대사 임명, 차대통령이 중한관계 중시한 것(4/9, 연합뉴스)
  -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는 김장수 신임 주중 한국 대사의 부임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중한관계를 얼마나 중시하는가를 보여 준다”고 말했다.
  - 한반도 실무를 담당하는 류 부장조리는 이날 오후 주중 한국대사관이 양국의 인적교류 1천만 명 돌파를 기념해 베이징에서 연 기념행사에 참석해서 한 축사에서 김 대사를 “한국 정치계에서 신망 높은 사람”이라고 부르며 이같이 평가했음.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사로 꼽히는 권영세 직전 대사에 이어 현 정부에서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김 대사가 주중대사로 온 것에 대해 공식적인 ‘환영논평’을 발표한 셈임.
  - 김장수 신임 주중대사는 지난달 31일 취임사에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공동의 목표로 ‘소통’, ‘협력’, ‘봉사’, ‘행복’이란 4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 북핵문제 해결 ‘중국 역할론’에 한중 전문가 견해차(4/9, 연합뉴스)
  -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 역할론’을 놓고 한국과 중국 전문가들이 견해차를 드러내 눈길을 끌었음. 중국 상하이(上海) 주재 한국총영사관이 9일 상하이에서 주최한 ‘한·중 미래 포럼’에서 현인택 고려대학교 교수가 주제 발표를 통해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나선데 대해 중국 전문가들은 공동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이명박 정부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현 교수는 “북한의 최근 핵관련 행보를 볼 때 이 시기가 지나면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어 “북핵관련 6자회담이 유용하다고 보지만 과거처럼 하는 것은 그다지 유용하지 못하다. 실질적이고 주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의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하다”며 “정치 지도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 이에 대해 장원링(張蘊嶺) 중국사회과학원 국제연구학부 주임은 “중국의 주도적 역할을 기대하지만 가장 중요한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다”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정부가 한반도 문제를 중요한 이슈로 다루지 못하면서 불확실성이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함. 또한, “6자회담의 가치는 아직 살아있고 형식을 조정해 재개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이 더 많이 논의하고 더 많은 인식의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 중국 관영언론, 사드배치, 양국관계 기초 흔들 것(4/10, 연합뉴스)
  -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 중국의 한 관영언론이 ‘양국관계 기초’ 등을 거론하며 다시 한 번 ‘사드 배치 불가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0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의 방한과 관련한 사설에서 “미국과 한국은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은 조선(북한)을 겨냥한 것이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중국의 모든 군사분석가는 이를 ‘어린 아이를 기만하는 말’로 여긴다”고 말함.
  - 이어 “만약 이 시스템이 결국 한국에 상륙한다면 중국의 여론과 근년 들어 쌓인 한국에 대한 호감은 무거운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양국 관계의 기초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고 덧붙임. 또한, 이 신문은 “서울은 절대로 이에 대한 요행심리를 가져선 안된다”는 표현도 동원했음.
  
- 주중 北대사관 “중국도 사드 타격범위 내에 있다”(4/11, 연합뉴스)
  -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 관계자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 “사드가 남한에 배치된다면 주변국은 자연히 그 타격범위 내에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 이 관계자는 11일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와의 인터뷰에서 포착범위가 1천km 이상인 사드 레이더는 ‘조선반도(한반도)용’이라는 목적을 훨씬 초월한다며 “조선(북한)의 위협 때문에 사드를 남한에 배치한다는 주장은 황당한 논리”라고 말했다.
  - 또 “일단 주변 대국에 충돌이 발생하면 조선반도는 전쟁의 위험 속으로 끌려들어 갈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며 “미군의 사드나 더욱 위험한 군사적 수단에 대응하려면 조선은 부득이 군사력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 한중일, 2020년 상호 인적교류 3천만명으로 확대 추진(4/12, 연합뉴스)
  - 한중일 3국은 12일 도쿄에서 관광장관 회의를 개최, 2014년 약 2천만명이었던 상호 인적교류 규모를 2020년에는 3천만 명으로 늘리는 목표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 공동성명은 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을 계기로 3국이 미국과 유럽 등의 여행객을 유치하는 공동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음.

- 한중일 관광장관 회의는 2011년 5월 이후 4년 만에 열린 것으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오타 아키히로(太田昭宏) 일본 국토교통상, 리진자오(李金早) 중국 국가여유국장(관광국장)이 참석했음.
- 한중일 FTA 7차 실무협상 13~17일 서울 개최(4/12,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제7차 실무협상이 13~17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밝혔음.
  - 이번 협상에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과 홍샤오동 중국 상무부 국제국 부국장, 타츠오 사토 일본 외무성 경제부국장을 각각 대표로 하는 협상단이 참여하며, 3국은 이번 협상에서 상품 양허 협상지침(모델리티)과 서비스·투자 자유화 방식 등 핵심 이슈들에 대한 논의와 함께 규범 및 협력 분야를 포함해 약 20개 작업반(전문가 대화) 회의를 열어 협정문 협상 등을 진행해 나갈 예정임.
  - 한중일 3국은 2012년 11월 협상을 시작한 이래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원칙’ 아래 지금까지 6차례 협상을 진행하며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지적재산권, 환경 등 20여개 분야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음. 3국은 이번 실무협상 결과를 토대로 5월께 서울에서 7차 수석대표 협상을 개최할 계획으로 알려짐.

#### 다. 한·일 관계

- 한일안보정책협의회, 14일 서울서 개최(4/6, 연합뉴스)
  - 한국과 일본 정부는 양국 간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안보정책협의회(안보대화)를 14일 서울에서 개최키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음.
  - 양국 안보대화는 약 5년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일본 측은 이달 하순 예정의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해 설명하고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임.
  -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두 나라 외교·국방 라인의 국장급 인사가 대표를 맡는 ‘2+2’ 형식의 협의체로 1998년부터 양국의 방위 정책, 북한 문제 등을 정기적으로 논의해 왔으나,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2009년 12월을 끝으로 중단되었음.

- 日 ‘독도도발’ 갈수록 노골화…관계개선 찬물 끼얹어(4/6, 연합뉴스)
  - 6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거친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담겨 있음. 이들 교과서는 독도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표기하고 “일본 고유영토임에도 이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등의 일방적인 설명을 실었음. 일본은 7일에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도 발표할 예정이어서 양국관계에 연쇄 충격이 예상된다.
  - 일본은 2008년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에서 “한국과 일본간에 독도에 대한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취급”이라고 명기했지만 2010년 3월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5학년 사회 교과서에서는 5종 모두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했음.
  - 지난해 1월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는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명시한데 이어 같은 해 4월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4종)에서는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음. 일본의 이 같은 도발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매듭을 풀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일관계 개선 분위기 조성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韓 독도 불법점거’ 쓴 日중학교교과서 3배로 늘어(4/6, 연합뉴스)
  -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내년부터 사용될 일본의 새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대다수에 실릴 예정임.
  - 일본 문부과학성(교육부)은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했음. 수위를 높여가는 일본 정부의 독도 도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하는 등 강하게 항의하면서 한일관계에 또 한차례 파문이 일었으며, 검정 결과 일본 사회과의 역사(8종)·공민(6종)·지리(4종) 등 3개 과목 총 18종의 교과서에 빠짐없이 독도 관련 기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됨.
  - 특히 역사 교과서에는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자국령으로 편입한 사실이 8종 모두에 실림. 또 에도(江戸) 시대(1603~1867) 초기 일본인들이 독도에서 조업했다는 주장과 한국의 ‘이승만 라인’ 설정 등이 상세히 실렸고, 이에 따라 내년부터 상당수 일본 중학생은 사회과의 3개 세부 과목에서 반복적으로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배우게 될 예정임.

- **日 우익성향 출판사 일부 식민지·침략 미화 시도(4/7, 연합뉴스)**
  - 6일 검정을 통과한 일본 중학교 사회과의 역사 교과서 가운데 일부 우익 성향 출판사의 책에는 식민지배와 침략을 미화하려는 의도로 의심되는 기술이 포함 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역사 교과서 중 도쿄서적(채택률 52.8%·이하 2012년 기준)과 교육출판(채택률 14.6%) 교과서 등 일선 학교에 널리 보급된 책은 나름대로 객관적인 서술 시도가 엿보인 반면 점유율이 미미한 우익 성향 출판사 책에는 문제 있는 기술들이 적지 않게 눈에 띄었음.
  - 연합뉴스가 확보한 검정 결과 자료에 의하면, 현재 일선학교에서 채택률 3.8%인 이쿠호사(育鵬社)역사 교과서는 일본이 조선을 병합한 이듬해인 1911년과 1936년의 조선 인구, 농경지 면적, 학교수, 학생수 등을 비교한 표를 실었음. 조선총독부 통계연보를 인용한 이 표만 보면 식민지 시기 조선인의 삶이 좋아졌다는 인식을 갖게 만들 것이 우려되는 내용이었음. 또 이 교과서에는 2차대전 관련 대목의 제목에 ‘태평양전쟁’ 뿐 아니라 일본 우익인사들이 쓰는 이름인 ‘대동아전쟁’을 괄호 속에 병기함.
  
- **일본 정부, 독도 영유권 주장 보고서 홈페이지 게재(4/7, 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7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면서 과거 공문서 등을 처음으로 수집,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함. 일본 정부는 이날 내각관방 영토주권 대책조정실 홈페이지에 게재한 독도 자료 보고서(사진)에서 시마네(島根)현에 있는 공문서 약 500점, 개인 소장 자료 약 500점 등 1천여 점의 독도 관련 자료를 확인, 목록과 화상 데이터를 작성했다고 밝히고 그 중 일부 자료를 공개했음.
  - 일본어판과 영어판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독도와 센카쿠에 대한 일본의 국내외 영유권 주장 홍보를 강화한다는 아베 정권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일본의 영유권 도발과 관련, 한국과 중국을 더욱 자극할 것으로 보임.
  - 야마타니 에리코(山谷えり子) 일본 영토문제 담당상은 이날 기자들에게 소재가 확인된 자료 가운데 약 200점을 올려름까지 데이터베이스화해 인터넷에서 누구라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

- 정부, 한일안보대화 신중모드…日도발에 여론 주시(4/7, 연합뉴스)
  - 중학교 교과서 검정과 외교청서를 통한 일본의 독도 도발이 이어지면서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안보대화와 관련해 애써 신중모드를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옴.
  -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5일 한일 양국이 안보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안보정책 협의회를 이달 말 개최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데 이어 6일에는 서울에서 14일 개최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까지 못박아 보도했음.
  - 한일 안보정책협회는 양국 외교·국방 국장급 인사가 대표를 맡은 ‘2+2’ 형식의 협의체로, 지난 1998년부터 양국의 방위정책, 북한 문제 등을 정기적으로 논의해오다 양국관계가 악화되면서 2009년 12월을 끝으로 중단되었음.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일본 언론의 이런 보도에 공식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실정임.
  
- 일본 정부, 한국 독도 항의에 “받아들일 수 없다” 반론(4/7, 연합뉴스)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7일 한국이 일본 교과서의 ‘독도 일본 고유영토’ 기술에 강력 항의한 데 대해 일본으로서는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론했다고 밝힘.
  - 스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전날 뱃쇼 고로(別所浩郎)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 통과에 항의한 것과 관련, 일본 정부의 이러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음. 그는 이번 교과서 검정은 “학습지도요령과 교과서검정심의회 전문적·학술적 심의에 입각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함.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도 이날 기자들에게 한국 정부의 항의에 대해 독도 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입장은 일관된 것이라면서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음.
  
- 日여당중진 가치공유 삭제, ‘한국 성숙도 부족’ 메시지(4/8, 연합뉴스)
  - 일한의원연맹(한일의원연맹의 일본 측 카운터파트)의 간사장인 일본 집권당 중진 인사가 한국 검찰의 산케이 신문 기자 기소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은 아직 성숙도가 부족하다”고 주장함.
  - 중의원 9선의 현역 국회의원인 가와무라 다케오(72·河村建夫) 의원은 7일 밤 BS 후지 TV에 출연한 자리에서 문제의 발언을 한 것으로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보도되었음.

- 가와무라 의원은 같은 날 발표된 2015년 일본 외교청서에 ‘한국과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한다’는 종전 표현이 빠진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 문제를 예시한 뒤 “언론의 자유 차원에서,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한국은 아직 성숙도가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일종의 일본 측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말했음.

■ **日중학 역사 교과서 ‘임나’ 어떻게 기술했나(4/9, 연합뉴스)**

- 6일 검정을 통과한 새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8종 중 4종에서 '임나(任那)'라는 기술이 등장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이 중 이쿠호샤(育鵬社)와 자유사(自由社) 등 2개 극우 성향 출판사가 역사 왜곡의 소지가 큰 기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음.
- 검정을 통과한 일본 역사 교과서 중 기존 채택률(2012년도 기준) 0.1%인 자유사는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비문에는 야마토(大和) 조정의 세력이 백제, 신라를 복속시켜 고구려를 위협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며 “이 시기 야마토 조정은 한반도 남부의 임나에 일본부를 설치해 영향력을 가졌다”고 기술했음. 이는, ‘지배’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임나일본부를 직접 거론했다는 점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한 기술로 평가됨.
- 또 채택률 3.7%인 이쿠호샤의 새 교과서는 “4세기 말 조선반도에는 (중략) 남부에 임나(가라·가야)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어, 복수의 작은 국가가 존재했다”며 “우리 나라는 임나에 대해 영향력을 갖게 됐다”고 기술했음.

■ **정부, 日 임나일본부설 기술 유감…재차 시정요구할 것(4/9, 연합뉴스)**

- 정부는 9일 최근 검정을 통과한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 임나일본부(任那 日本府) 설이 실린 것으로 전해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시정을 다시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힘.
- 외교부 노광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011년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시 유사한 왜곡 기술에 대해 강력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이번 검정 통과본에 여전히 실린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음. 또한, “임나 일본부설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일본 학계에서도 통설인 것으로 안다”면서 “관계기관의 구체적 분석을 거쳐 문제 제기를 재차하고, 관련 기술의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정부는 이와 함께 일본 문화청이 홈페이지에서 한국의 문화재 일부에 ‘임나(任那)’라는 표기를 쓴데 대해 항의하고 수정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주일한국문화원 방화용의자 체포...39세 일본인 남성(4/10, 연합뉴스)
  - 지난달 25일 심야에 일본 도쿄 신주쿠(新宿)구 소재 주일 한국 문화원 건물에서 방화를 시도한 용의자가 10일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음.
  - 일본 경찰은 이날 오후 4시30분께 사건 용의자로 39세의 일본인 남성 곤도 도시카즈(近藤利一·무직)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문화원 관계자가 밝혔음. 현재 요쓰야(四谷) 경찰서가 곤도 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며 12일 도쿄지검으로 신병을 이송, 후속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함.
  - 지난달 25일 밤 11시50분께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한국 문화원 건물 옆 보조 출입구 외벽에 라이터용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인 뒤 도주했음.
- 외교부, 日, 국제사회가 아베 총리 연설 기대하는 것 알 것(4/10, 연합뉴스)
  - 외교부는 10일 오는 29일로 예정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과 관련해 “미국 의회나 국제사회가 아베 총리로부터 어떤 얘기를 듣고 싶고, 무엇을 기대하는지 충분히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음.
  -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국내적으로도 아베 총리의 합동연설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고, 다들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 미 의회 지도부도 이런 것을 다 비교 형량해 부담을 안고 이런 결정(합동연설)을 내렸으리라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음.
  - 이는 아베 총리가 미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한일간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진정한 반성과 분명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됨.
- 일본 방위상, 내달 한일 국방장관 회담 희망(4/10, 연합뉴스)
  -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내달 하순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안전보장회의 때 한민구 국방장관과 회담하고 싶다고 밝혔음.
  -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날 기자들에게 “한일관계는 북한 미사일 방위 등 안보면에서 중요하다”면서 일본의 안전보장 법제 정비 작업이 끝나기 전에 한 장관과

만나 안보 법제 등을 설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 그는 또 한 장관에게 이달 하순 개정 예정인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군과 자위대가 물자 등을 서로 융통할 수 있는 물품역무상호 제공협정(ACSA)과 2012년 추진했다가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도 촉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 동북아특위, 日교과서 역사왜곡 규탄 결의안 채택(4/10, 연합뉴스)

-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왜곡 중학교 교과서 검정 승인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위는 이날 채택한 ‘아베 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 및 고대사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서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역사를 날조하고 있는 연속적인 도발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 또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앞에서는 미래지향적 우호증진을 이야기 하면서, 뒤에서는 적극적으로 역사를 왜곡·날조하고 영토를 침탈하고 있는 이중적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으며, “왜곡·날조된 교과서 문제는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 간 미래세대의 갈등과 분쟁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독도는 일본 땅’이란 왜곡된 사실에 대해 검정을 승인하고 내년부터 모든 중학생들의 교육에 반영시키도록 결정한 것은 우리 영토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탈행위로,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일본 문화청 장관 ‘임나’ 표기 비판에 무대응 시사(4/10, 연합뉴스)

- 아오야기 마사노리(靑柳正規) 일본 문화청장관은 문화청 홈페이지에서 한국 문화재에 관해 ‘임나(任那)’ 표기를 쓴 것에 대한 비판에도 당장 이를 바꿀 가능성이 적다는 뜻을 내비쳤다.
- 이날 도쿄(東京)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한국 음식문화 소개 행사에 참석한 아오야기 장관은 문화청이 일부 한국 문화재의 제작 시기에 관해 ‘임나’라는 표현을 쓴 것을 바꿀지 검토할 계획이 있느냐는 한국 언론의 물음에 “그에 관해서는 아직 듣지 못했다”고 소극적으로 반응했다. 그는 삼국시대를 임나라고 표현한 것을 그대로 두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밝히

는 대신 “그것이 줄곧 바뀌지 않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 또한, 그는 대한민국이 수립됐음에도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 지배할 때 붙인 표기를 그대로 쓸 것이냐는 지적에 “대체로 어떤 시대든 해석이 바뀐다. 그러므로 그것이 어떤지는 지금부터 전문가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일”이라고 반응함.

■ **日 전 언론인, 군 위안부 피해 증언 공개한다(4/10, 연합뉴스)**

- 저널리스트 출신 일본인 활동가가 일제강점기에 일본 현지 군 비행장 공사 현장에 끌려온 조선인 남성과 위안부 여성이 있었다는 증언을 취재한 내용을 공개함.
- 9일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통영거제 시민모임(대표 송도자)에 따르면 나라현 일간지인 나라신문사(奈良新聞社)에서 1971년부터 1984년까지 13년 동안 기자로 근무했던 가와세 순지(67)씨가 1975년 8월 일본에서 재일조선인 강정시(당시 65세) 씨를 인터뷰해 기록한 취재노트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힘. 일제강점기에 일본 나라현 덴리시 ‘야나기모토 비행장’ 공사 현장에 조선인 남성 3천여명이 강제로 동원됐고 여성 20여명이 위안부로 끌려왔다는 것임.
- 시민모임은 당시 취재노트에 군 관할지 내 일본군 위안부 20여명을 위한 위안소가 설치돼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취재노트에는 손으로 그린 시설물 배치도 등도 포함돼 있는데, 현재 비행장 시설 배치도와 비교하면 상당 부분이 일치함. 원본은 따로 보관하고 있는데 전체 분량이 수백 쪽으로, 이중 조선인 강제 피해에 대한 부분은 20쪽 정도임.

■ **‘아베담화’ 담당자 “무라야마담화 표현에 매일 것 없어”(4/10,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일명 아베 담화)에 관여하고 있는 아베 총리 측근 학자가 식민지배와 침략 등 무라야마(村山) 담화(전후 50주년 담화)의 핵심 단어에 엇매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음.
- 아베 담화 관련 총리 자문기구(전문가 간담회) 좌장 대리인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 국제대학 학장은 이날 도쿄 도내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전후 50년과 70년에 말하는 것이 다소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음.
- 그는 이어 “(아베 담화에 대해) 언론은 무라야마 담화의 키워드(핵심 단어)가 들어갈지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며 “‘침략’, ‘식민지’, ‘통절한 반성’, ‘사죄’ 이것

은 조금 왜소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음. 또 "침략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논의가 뒤섞여 있지만 침략사실이 있었는지 어떤지, 그것을 담화에 쓸지 말지, 그리고 사죄를 할지 말지, 이것들은 모두 별개"라고 주장했음.

- 한일, 4년만에 관광장관회담...수교 50주년 10대사업 추진(4/11, 연합뉴스)
  - 한국과 일본은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아 조선 통신사 옛길 걷기 등 관광 교류 관련 10대 공동사업을 추진키로 했음.
  - 한중일 관광장관 회담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1일 도쿄 프린스호텔에서 오타 아키히로(太田昭宏) 일본 국토교통상과 양자 회담을 개최, 이같이 합의했다고 문체부가 밝혔음.
  - 양국의 관광담당 장관이 공식적으로 양자 회담을 개최하기는 2011년 이후 4년 만으로, 10대 관광 사업은 조선통신사 유적 관련 교류사업, 제주-규슈 올레길 걷기 교류 등 스포츠 관광 활성화, 청소년 교류 강화, 한일 공동 사진 콘테스트, 평창 동계올림픽(2018년) 및 도쿄 하계올림픽(2020년)을 활용한 공동 관광 마케팅, 지방 교류 활성화 등임. 양국은 이들 사업들을 발판삼아 작년 504만 명 선이었던 양국간 인적교류를 올해 700만 명 수준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기로 했음.

##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마. 미·중 관계

- 미국-필리핀, 이달말 남중국해 주변서 대규모 군사훈련(4/7, 연합뉴스)
  - 중국과 필리핀이 영유권 분쟁을 빚는 남중국해 인근에서 미국과 필리핀의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이 실시될 예정임.
  - 이는 연례 훈련이지만 참가 병력이 작년의 2배에 이르는데다 최근 중국과 필리핀이 또다시 대립각을 세운 직후 이뤄지기 때문에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 7일 ABS-CBN방송과 필리핀스타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제31차 발리카탄 훈련

이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필리핀 서부 파나이섬과 팔라완섬, 마닐라 북부 옛 미군 공군기지 등에서 벌어질 예정임. 훈련 지역에는 중국과 필리핀이 영유권을 다투는 남중국해 스카보러(중국명: 황옌다오)에서 220km가량 떨어진 삼발레스 해군 기지도 포함돼 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필리핀 군당국은 중국을 겨냥한 훈련이 아니라고 설명했다지만 최근 필리핀과 영유권 갈등을 다시 드러낸 중국의 반응이 주목됨.

■ 중국, 美국방장관 아시아 동맹국 순방에 촉각(4/7, 연합뉴스)

-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일본, 한국, 인도 등 순방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중국 측은 그의 방문 목적이 '동맹 결속력' 강화에 있다고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8일 '군사동맹 끌어들이기 공세 강화, 미국 신임 국방장관이 중국 주변 아시아국을 방문하다'라는 기사에서 그의 이번 방문이 '아시아태평양재균형' 전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음.
- 이와 관련, 카터 장관이 아시아 순방에 앞선 지난 6일(현지시간) 애리조나 주립대학에서 한 강연을 통해 '아시아태평양재균형' 전략이 앞으로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점을 지적하며, 특히 중국의 '불투명한 국방예산', '중국발 해킹',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행동' 등에 대해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힌 점도 거론했음. 중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오랫동안 추진해 온 '아시아태평양재균형' 전략을 중국에 대한 포위, 견제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음.

■ 힐러리 전 국무장관, 중국, 여성운동가 구금 중단해야...중국 반발(4/8, 연합뉴스)

-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중국의 여성운동가 구금 사례를 비판해 중국 정부로부터 반발을 샀음.
- 클린턴 전 장관은 6일(현지시간) 중국의 여성운동가 구금 실태를 다룬 뉴욕타임스(NYT) 기사의 트위터 댓글을 통해 "중국의 여성운동가 구금은 중단되어야 한다"면서 "이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음.
- 그러자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법에 의해 다스려지는 나라로, 관련 부서에서 관련 사안을 법에 따라 잘 처리할 것"이라면서 "다른 나라의 공인(公人)은 중국의 사법 주권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고 미 언론이 전했다.

- 카터 美국방, 방한 첫날 중국에 날선 경고 메시지(4/9, 연합뉴스)
  -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9일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군비를 증강할 의지를 분명히 밝혀 주목됨.
  -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를 위해 일본과 한국을 잇달아 방문한 카터 장관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강자로 떠오르는 중국에 선명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옴.
  - 카터 장관은 이날 경기도 평택시 오산공군기지에 전용기로 도착한 직후 주한미군 장병과 가진 ‘타운홀 미팅’ 형식의 만남에서 “미국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많은 새로운 군사력이 이곳 전구(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히며, 그는 “우리는 새로운 스텔스 전투기, 스텔스 폭격기, 새로운 함정 등을 만들고 있고 이 지역에 투입할 것”이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미국의 최신편 무기 를 집중적으로 배치할 것을 예고했음. 미국이 추구하는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을 첨단무기로 뒷받침할 의지를 명확히 밝힌 것으로,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카터 장관 발언의 주된 표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중국인 것으로 보임.
- 美 ‘사드 논란’ 진화 시도…中엔 매서운 견제구(4/10, 연합뉴스)
  -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의 10일 회담에서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표면화되지 않았음.
  - 카터 장관은 이날 회담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 문제가 한국뿐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에게도 참여한 논란거리라는 것을 인식한 듯 신중 모드로 일관했음.
  - 카터 장관은 회견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했느냐’는 기자들의 집요한 질문에 “사드는 아직 생산 단계에 있다”며 “그 누구와도 아직 사드 배치 논의를 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음. 그러나 그는 사드를 언제, 어디에 배치할지는 “생산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힘.
- 오바마 대통령, 중국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에 경고 메시지(4/10,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각) 중국에 대해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다른 나라를 ‘밀어제쳐서는 안 된다’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음.

-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자메이카 웨스트인디스대학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가 중국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국가의 규모와 힘만 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종속적 위치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필리핀이나 베트남이 중국만큼 크지 않다고 해서 중국이 그 나라를 밀어제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 앞서 미국 국무부도 중국이 분쟁 지역에 전초기지를 건설함으로써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음.

■ 중국 국방부 “카터, 언행에 신중 기하라” 경고음(4/11, 연합뉴스)

- 중국 국방당국이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의 센카쿠(尖閣·중국어명 댜오위다오 <釣魚島>) 열도 관련 발언에 대해 “미국이 언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며 반발했음.
- 11일 경화시보(京華時報)에 따르면 중국 국방부 신문사무국은 전날 기자의 질문에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영토는 자고이래 중국의 고유영토”라며 “국가의 영토 주권을 수호하려는 중국정부와 군대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이같이 말했음. 또 미·일 동맹을 겨냥, “(이는) 냉전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제3자를 겨냥해서는 안되며 지역의 평화·안정을 해쳐서는 안된다”고 경고했음.
- 카터 장관은 최근 일본을 방문해 ‘미일안보조약’의 적용 범위와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관리하는 상황을 거론하며 일방적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그 어떤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말했음.

## 바. 미·일 관계

■ 미·일 국방장관, 방위협력지침 개정 최종 조율(4/8, 연합뉴스)

-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과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도쿄에서 회담, 미군과 자위대의 역할분담 등을 규정한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최종 조율 작업을 벌임.
- 두 장관은 일본 방위성에서 열린 이날 회담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포함한

일본의 새로운 안전보장법제 정비 관련 내용을 미일방위지침 개정에 반영하는 문제 등을 중점 협의한 것으로 보임. 교도통신에 따르면 카터 장관은 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방위지침 개정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그 이외의 지역에도 보다 큰 안정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 미일 양국은 오는 27일 외교·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를 워싱턴에서 개최, 방위지침 개정에 정식 합의할 예정임. 28일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하고 미일동맹 강화를 확인할 것으로 알려짐.

■ 미국방장관 한미일 미래 이익이 현재 정치보다 중요(4/8, 연합뉴스)

-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협력의 잠재 이익이 “과거의 긴장과 현재의 정치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 카터 장관은 도쿄에서 9일 열리는 미일 국방장관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하기 전 요미우리 신문과 한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미일 3각 공조의 중요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우리 세 나라(한미일)는 미래를 지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힘.
- 카터 장관은 “미국은 (한일관계의) 역사적 민감성을 인식한다”고 전제하긴 했지만 결국, 과거사 갈등 해결보다 북한 핵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일 공조 복원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됨.

■ 아베 총리, 미 의회 연설서 역사문제 얘기해야(4/8, 연합뉴스)

- 토머스 시퍼 전 주일 미국대사는 7일(현지시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미 의회 연설과 관련, “아베 총리가 역사 문제에 대해 (사태해결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긍정적 방식으로 뭔가 얘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시퍼 전 대사는 이날 일본 최대의 공익법인인 사사카와 평화재단 주최로 워싱턴 DC의 로널드 레이건 빌딩에서 열린 ‘미일 관계 : 이미지와 현실’ 토론회에 참석, “이번 미 의회 연설은 일본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이자 아베 총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연설”이라면서 이같이 밝힘.
- 시퍼 전 대사는 “아베 총리가 역사 이슈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바로 언론의 머리기사가 될 것이고, 이는 아베 총리가 원하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음. 대사의 이 같은 언급은 아베 총리가 오는 29일로 예정된 미 의회

연설에서 일본의 과거 침략역사와 식민지 지배 등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해석됨.

- 미국, 위안부, 性목적 일본군 여성 인신매매로 끔찍한 인권침해(4/8,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달 하순 워싱턴 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라고 표현한 것을 둘러싸고 용어 해석상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 영어 상의 ‘human trafficking’ 국가가 위안부를 강제동원한 행위까지 포괄하고 있으나 한국어와 일본어에서는 ‘인신매매’는 개인적인 착취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6일 도쿄 도내에서 요미우리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의 군위안부 발언에 대해 “여성 학대와 인신매매 방지에 관한 미·일 공통의 대처는 과거를 인정함으로써 한층 강화된다”며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인 메시지였다”고 말했다고 요미우리가 7일 보도함.
  - 이는 미국 국무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광의의 인신착취 행위를 뜻하는 ‘human trafficking’이라는 용어를 써왔기 때문에 아베 총리의 발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뜻으로,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인신매매’는 개인이 상업적 목적으로 착취하는 행위를 특정하고 있어 용어 해석 상의 차이가 큼.
  
- 태평양전쟁 격전지 찾은 일왕 “슬픈역사 잊지말자”(4/8, 연합뉴스)
  - 아키히토(明仁) 일왕이 8일 전후(戰後) 70주년에 즈음한 위령 행보의 일환으로 태평양전쟁 격전지였던 팔라우를 처음 방문했음.
  - 아키히토 일왕 내외는 이날 전세기 편으로 팔라우에 도착해 토미 레멩게사우 대통령 내외와 회동한 뒤 현지 정부가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음. 미크로네시아 연방공화국과 마셜 제도 대통령 부부 등이 초청된 만찬 석상에서 아키히토 일왕은 “우리는 앞서 전쟁에서 숨진 모든 사람들을 추모하고, 그 유족이 걸어온 고난의 길을 생각하고 싶다”고 말했음.
  - 일왕 부부는 방문 마지막 날인 9일 1944년 전투에서 약 1만 명의 일본군과 1천700여명의 미군이 사망한 팔라우 페틸류섬을 방문함. 종전 70주년(8월15일)을 앞둔 시점에 옛 격전지에서 교전 쌍방이었던 미국과 일본 측 희생자 위령비에 각각 헌화함으로써 평화에 대한 염원을 일본과 국제사회에 전할 예정임.

- 미일방위지침에 日집단지위권 한반도행사 사전동의 반영될 듯(4/10, 연합뉴스)
  - 일본이 한반도 주변지역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미·일 방위지침(가이드라인)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우리 정부는 현재 방위지침 개정을 위해 일본과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 정부를 상대로 이 같은 우리 측의 입장이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안다고 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소식통들이 전함.
  - 이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14일부터 이틀간 워싱턴DC에서 양국 국방부 차관보급 관료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고위급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어 16일부터 이틀간 한미일 국방부 차관보급이 참여하는 3자 안보토의(DTT)가 열릴 것임.

## 사. 미·러 관계

- 냉전의 그림자…미국·러시아 북극권서 긴장 고조(4/7, 연합뉴스)
  - 러시아가 최근 동쪽으로는 베링 해를 중심으로 한 북극권에서, 서쪽으로는 북대서양에서 전투기 초계활동을 강화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과 갈등을 빚고 있음.
  - 6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에 따르면 미 전투기 F-22는 지난해 알래스카 주의 틴 시티 공군기지에서 10차례 긴급 출격을 감행했는데, 이는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임. 이 같은 긴급 출격은 미국과 러시아가 마주 보는 베링 해 상공에 러시아 폭격기 Tu-95 베어와 미그-31 전투기가 어떤 사전 통보나 자체 신호 없이 갑자기 출몰했기 때문임.
  - 특히 미국과 러시아는 베링 해를 사이에 놓고 공중에서 쫓고 쫓기는 ‘숨바꼭질’을 지속하는 형국이며, 심지어 러시아 전투기들은 캘리포니아 북쪽 해안에서 50마일 떨어진 곳까지 남하하는 ‘도발’을 감행하기도 한다고 미 공군 당국자는 전했다. 이와 관련, 윌리엄 E. 고트니 미 국방부 북부 사령관 겸 북미 항공방위사령관은 “우리는 북극권의 전략적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고 있다”면서 “지금도 ‘제2차 냉전’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아직 냉전이 끝난 게 아니다”고 말했다.

- 러시아 해커, 백악관 컴퓨터에 침투(4/8, 연합뉴스)
  - 지난해 10월 미국 백악관 컴퓨터 시스템에서 포착된 사이버 침입의 배후는 러시아 해커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CNN방송이 7일(현지시간) 보도함.
  - CNN은 익명의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러시아 해커들이 최근 몇 달 사이에 국무부 사이트를 거쳐 백악관 컴퓨터 시스템의 민감한 부분에 침투, 대외에 공개되지 않는 대통령 일정 등과 같은 정보에 접근했다고 전했다.
  - 물론 해커들이 접근한 정보가 기밀로 분류될 만큼의 내용은 아니지만 외국 정보기관들에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CNN은 덧붙였다.
  
- 미 북부사령관, 러시아 미국 앞바다에 군함 2척 배치(4/9, 연합뉴스)
  - 윌리엄 고트니 미군 북부사령관은 러시아 군함 2척이 미국 앞 바다에 배치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음. 8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따르면 고트니 사령관은 러시아 군함이 쿠바와 베네수엘라 근처에 있으며, 러시아 장거리 비행 편대가 캐나다, 알래스카, 영국해협 등지에서 목격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음.
  - 이들 지역에서 비행기가 목격된 것은 처음으로, 고트니 사령관은 “러시아군이 과거 소련군보다 훨씬 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러시아가 미국에 ‘우리도 강대국’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음.
  - 그는 러시아 장거리 크루즈미사일 공격 범위가 미국 알래스카와 캐나다의 주요 본토방어 시설까지 미칠 수 있으며, 러시아의 정찰비행 횟수도 크게 늘어 북미 지역 안보가 위협당하고 있다고 경고했음.
  
- 러 “미 정찰기가 영공 접근”…위협비행 부인(4/11, 연합뉴스)
  - 러시아는 자국 전투기가 발트해 상공에서 미군 정찰기를 위협했다는 미국 주장을 반박했음. 러시아 국방부는 1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지난 7일 발트해 상공에서 러시아 영공으로 정체불명의 비행체가 접근했으며 러시아 공군 소속 SU-27 전투기가 출격했다”고 밝혔음.
  - 국방부는 SU-27이 정체불명 비행체의 소속 및 기종 확인차 몇 차례 선회 비행을 했으며 미 공군 소속 정찰기 RC-135로 확인됐다고 설명하며, 그러면서 미군 정찰기가 이후 항로를 바꿔 상황은 종료됐다고 위협비행을 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함.
  - 러시아는 나아가 오히려 미군 정찰기가 통신장치를 꺼둔 상태였다고 미국의

의도적 영공침범 가능성을 제기했음.

## 아. 중·일 관계

### ■ 중국 일본, 후대에 역사 정확히 가르쳐야(4/7, 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와 관련, “강한 책임감을 갖고 정확한 역사관을 일본의 젊은 세대들에게 가르치라”고 강하게 촉구함.
- 일본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18종은 모두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釣魚島>) 열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이 포함돼 중국을 자극했음. 화대변인은 이에 대해 “‘댜오위다오’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고유영토로 역사적으로, 법리적으로 모두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서 “일본이 잘못된 주장을 어떻게 펼치든지 간에 댜오위다오가 중국에 속한다는 기본적 사실은 변치 않는다”고 주장하였음.
- 화대변인은 난징(南京)대학살에 관한 기술이 변경된 것과 관련해서도 “난징 대학살은 일본 군국주의가 중국 침략전쟁 중에 일으킨 잔혹한 죄행의 하나로 역사와 국제사회가 모두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그 명백한 증거는 절대로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으며, 이날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중국이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영해 침입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음.

### ■ 중국 언론, 일본 교과서 역사인식 또 퇴보(4/7, 연합뉴스)

- 중국 언론은 일본 정부의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 “일본의 책임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며 과거사 퇴행 행보를 비판함. 관영 신화통신은 7일 일본의 검정 결과를 전하는 기사를 통해 “일부 교과서의 역사인식 문제와 관련한 표현이 또다시 퇴보했다”고 지적했음.
- 통신은 이 같은 역사 퇴행 행보로 난징(南京)대학살(1937~1938년)과 관련해 일부 교과서는 일본군이 다수의 포로와 주민을 살해했다는 현행 교과서 기술을 “포로와 주민을 말려들게 해 다수의 사상자를 냈다”로 변경됐고 일부 교과서에 서 현행 교과서에 있는 “일본군의 만행으로 비난받았다”는 표현도 삭제됐다는 점을 거론했음.
- 아울러 식민지 조선에서의 토지조사 사업과 관련, “근대화를 명목으로” 했다는

표현은 검정을 거쳐 “근대화를 목적으로” 했다는 것으로 수정됐고 일본군에 의한 오키나와(沖繩) 주민의 집단자살 사건과 관련해서도 “자살을 강요당했다”는 표현이 검정을 거쳐 “자살의 근경으로 빠져들었다”로 수정됨으로써 일본군의 책임을 희석시켰다고 비판함.

■ 일본, 중국 주도 AIIB에 15억달러 출연 예상(4/8, 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15억 달러(1조6천 300억 원) 상당의 기금을 출연할 것으로 8일 알려짐.
- 교도통신이 이날 입수한 일본 정부의 AIIB 제출 문서 초안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AIIB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15억 달러 상당의 기금 출연을 계획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이는 일본 정부가 AIIB 참여를 사실상 공식화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음. 하지만, 일본이 AIIB 설립을 주도하는 중국 다음으로 많은 기금을 출연하는 것이지만, 이에 걸맞은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라고 교도통신은 지적했음.

■ 중국-일본, 의회 교류 3년 만에 재개(4/8, 연합뉴스)

- 중국과 일본 사이의 의회 교류가 9일 3년 만에 재개될 예정임. 부총리급인 지빙쉬안(吉炳軒)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격)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전인대 대표단이 8일 도쿄를 방문했음. 이날 지 부위원장은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대표와 민주당 본부에서 회담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전인대 대표단과 일본 의원들은 9~10일 이틀 일정으로 2012년 9월 일본의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 국유화 이후 중단된 중일 의회 교류위원회를 약 3년 만에 개최할 예정임.
- 중국의 부총리급 인사가 일본을 방문한 것도 일본의 센카쿠 국유화 이후 처음으로, 일본의 센카쿠 국유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2013년 12월) 등으로 얼어붙었던 중국과 일본의 고위급 교류는 작년 11월 베이징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 이후 서서히 회복하는 추세임.

- 중국, 일본에 “재주 피우다 일 망치지 말라” 경고(4/8, 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센카쿠(尖閣.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 열도에 관한 자료를 대거 공개하며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나선 데 대해 “재주를 피우려다 일을 망치지 말라”며 강하게 경고했음.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일본 측에 공개된 자료를 신중하게 다룰 것을 촉구한다”면서 “일본은 온갖 수를 다 짜내어 다오위다오가 일본 땅이라는 점을 증명하려 하지만 이런 자료들은 단장취의(斷章取義)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무시한 것”이라면서 다오위다오가 중국에 속해 있다는 기본적 사실은 변치 않는다고 주장했음.
  - 그는 명대와 청대의 많은 지도상에 다오위다오가 표시돼 있고 갑오전쟁(청일전쟁) 이전의 서방국가의 지도에도 다오위다오가 중국 땅이란 점이 명시돼 있다는 점등을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들었음. 화 대변인은 “일본 측이 갑오전쟁 직후 다오위다오와 대만 및 부속도서를 식민통치했지만 2차대전 종전 이후 국제법에 따라 다오위다오는 중국으로 반환된 것”이라고 주장했음.
  
- 일본, 오키나와 남쪽 섬에 중국 견제 미사일 배치(4/11, 연합뉴스)
  - 일본 방위성은 오키나와(沖繩) 남쪽 난세이(南西)제도 방위를 강화하기 위해 오키 나와현 미야코지마(宮古島)에 육상자위대 경비부대를 배치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보도했음.
  - 낙도 방위 등을 전문으로 하는 550명 규모의 부대 외에 항공기를 격추할 수 있는 지대공 미사일(SAM) 등을 2018년도 말까지 배치, 센카쿠(尖閣·중국명 다오위 다오<釣魚島>)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할 예정임.
  - 신설되는 부대는 낙도 상륙을 저지하거나 대규모 재해에 대처하는 경비부대로, 항공기와 함정에 의한 무력공격에 대비해 SAM 외에 지대지 미사일(SSM) 배치 등도 계획 중임.

## 자. 중·러 관계

- 러·중 북핵 6자회담 재개 환경 조성 필요성 공감(4/7, 연합뉴스)
  - 러시아와 중국은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데 같은 견해를 갖고 있다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7일(현지시간) 밝혔다.
  -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모스크바를 방문 중인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한 뒤 “(중국 측과) 교착 상태에 있는 한반도 핵문제와 관련한 긴밀한 조율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6자회담 재개를 가능케 할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은 이에 대해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 라브로프 장관은 또 러시아와 중국이 우크라이나, 시리아, 예멘 위기 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도 견해를 같이했다고 전함.

## 차. 일·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국제전략연구실 제공

### Ⅲ. 북한 인권 동향

#### 1. 북한 내부실상 및 대내외 동향

- 북, 가뭄막이 동원에 주민들 고통(4/14, 자유아시아방송)
  - 올해는 노동당 창건 70돌을 경축하기 위한 수많은 건설동원에 가뭄극복을 위한 물막이 공사까지 제기돼 주민들은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 국경연선 지역에 사는 친척방문을 왔다고 밝힌 함경남도의 한 주민은 “지난해 함경남도는 가뭄으로 하여 농사에 큰 손실을 봤다”면서 “지난 겨울 내내 눈이 거의 오지 않아 올해는 최악의 가뭄이 닥쳤다”고 밝혔다.
  - 함흥시 임동리와 중흥리 일대는 성천강의 지류인 호련천이 말라붙어 당장 마실 물조차 구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강조했다.
  - 사정이 이렇다보니 성원, 용봉, 중흥리 일대 농촌가정들에서는 함흥 수리기계 공장에서 만들고 있는 수동식 펌프수도를 앞 다뤄 설치하고 있는데 당장 다가온 농사에 쓸 물이 없어 협동농장들마다 비상이 걸렸다고 그는 언급했다.
  - 이와 관련 자강도의 한 소식통은 “물이 흐르는 곳엔 닥치는 대로 보막이를 하고 있다”며 “보막이를 위해 국토보존관리부 산하 기관들과 농촌건설대 노동자들,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모두 동원됐다”고 말했다.
  - 쫄장과 우물을 파 눈에는 물을 댈 수 있지만 높은 지대에 심는 발작물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물을 댈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때문에 주변 산골짜기에 계단식으로 보를 쌓아 흐르는 물을 잡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 이러한 보는 순수 인력으로 완공해야 하기 때문에 보막이에 동원된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고역을 치른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 캐나다 친척과 몰래 10분 통화한 北주민 결국…소식통 “北보위부, 태양열 배터리로 감청 전파탐지기 가동”(4/14, 데일리NK)
  - 북한 당국이 탈북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지역에 검열조를 파견한 가운데 국경연선 지역의 철통 경비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 국경지역 경비인력이 증강되고 국가안전보위부 최신탐지설비들이 동원돼 경비

가 강화되고 있다고 소식통이 알려왔음.

- 양강도 소식통은 “얼마 전 영농기와 갈수기를 맞아 국경지역경비를 ‘철통같이 강화’할 데 대한 중앙당 지시문이 하달됐다”면서 “국경부대들의 경비조직과 순찰 근무강화, 보안기관의 유동인원 철저한 장악 통제 내용이 강조됐다”고 전했다.
- 이어 “이 같은 조치로 경비대는 강변접근 인원은 물론 발일을 하는 주민들의 동태를 살피는 ‘망원감시초소’까지 군데군데 만들었다”면서 “야간에는 3인 1조로 구성된 수십 개의 강둑 순찰 조들이 15분이 멀다하게 꾸준히 교대로 경비를 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 또 소식통은 “요즘 발같이 철이다 보니 주민유동이 많고 더욱이 갈수기 국경의 두만강 수심이 낮아져 탈북 가능성이 높아진데 따른 조치”라면서 “보위부가 국경지역에 새로 증설한 신형전파탐지기와 전파장애(방해)설비가 쉴 새 없이 가동하고 있어 불법통화는 매우 어려워 졌다”고 설명했다.
- 소식통에 의하면, 농촌지역 주민들은 농번기가 되면 여기저기에 널려있는 소토지(개인텃밭) 밭갈이에 바쁘기 때문에 새벽부터 저녁까지 야산은 물론 강변으로 오가는 주민 통제 역시 어려움.
- 특히 갈수기로 강물은 현저히 줄어들어 마음만 먹으면 순식간에 탈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국이 국경경비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 소식통의 설명임.

■ “김정은, ‘대방으로 위장한 프락치 입국 차단’ 지시”…소식통 “北, 최근 중국 무역업자 출입 불허…통화·송금도 어려워”(4/14, 데일리NK)

- 북한 김정은이 북중 무역을 하는 대방들이 내부 정보 유출이나 외부 정보를 유입시키고 있다고 판단, 이들의 입국을 불허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음.
- 중국의 대북 소식통은 “3월 2일 에볼라가 해제되면서 중국 대방(무역업자)들이 조선(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희망에 부풀었으나, 북한 당국이 허가를 안 해주고 있다”면서 “국가 간 무역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만 무역업자들 간의 교류는 거의 단절되다시피 됐다”고 전했다.
- 이어 소식통은 “김정은이 3월경 ‘조국에 도움이 안 되는 외국인들의 출입을 자제시킬 것’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면서 “순수하게 무역을 하는 대방들도 있지만 북한 당국이 판단하기에 공화국에 위해(危害)를 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판단해서 김정은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 그러면서 소식통은 “북한을 드나드는 무역 대방들 중에는 무역을 하면서도 북한

내부 동향이나 정보 등을 외부에 알려주고 돈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북한 당국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한 내부정보 유출이나 반대로 외부 정보 유입 등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북한 지난해 평균 식량배급, 유엔 권장량 63% 수준(4/16, 미국의소리)
  - 북한 당국이 지난해 주민 한 명 당 하루 평균 383g의 식량을 배급했다고 유엔이 밝혔음.
  - 유엔이 최근 발표한 ‘대북 인도주의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양은 전년도의 하루 평균 배급량 385g과 비슷한 수준임.
  - 하지만 세계식량계획 WFP의 1인 당 하루 최소 권장량 600g의 63%에 불과한 수준이며, 북한 당국이 목표로 하는 573g에도 크게 못 미치는 규모임.
  - 특히 북한 당국의 지난해 8월과 9월 식량 배급량은 250g으로, 지난 3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했다.
  - 세계식량계획은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의 70%인 1천8백만 명 가량이 식량배급제에 의존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영양 부족이 여전히 큰 문제라고 밝혔음.
  - 세계식량계획은 지난해 7월 북한 내 133 가구를 방문해 식량 실태를 조사했다며, 조사 가구의 81%가 인터뷰 시행 전 1주일 동안 질과 양 면에서 적절한 식사를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음.
  - 또 콩 생산 감소 등으로 북한 주민들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현재 북한 2세 미만 영유아의 85%와 산모의 절반 가량이 최소한의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고 있음.
  - 세계식량계획은 북한 주민의 영양 개선을 위해 올해 양강도와 함경남북도 등 9개 도 87개 군의 취약계층 180만 명에게 식량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를 위해 미화 6천9백4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지난 8일 현재 모금은 목표액의 19.3%인 1천3백40만 달러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세계식량계획은 밝혔음.
- 북, 때 아닌 장마당 가짜상품 단속(4/16,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당국이 갑작스럽게 담당 보안원(경찰)들과 관리원들을 동원해 장마당에서 가짜 상품 단속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 여태껏 없던 가짜(위조) 상품단속에 장사꾼들은 그야말로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이야기했음.
  - 15일 북한 장마당 사정에 정통한 자강도의 한 소식통은 “요즘 장마당에서 가짜 상품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지금은 식료품 위주로 단속하지만 공업(소비)품도 모두 단속하겠다고 선포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음.
  - 식료품은 주로 개인들이 집에서 만들어 공장제품으로 포장해 파는 술과 담배, 당과류인데 일부에선 두부나 계란, 젓갈류조차도 팔지 못하게 한다고 그는 설명했음.
  - 이와 관련 소식통은 “그동안 장마당에서 가짜 약품들에 대한 단속은 많이 있었으나 먹는 식품을 단속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갑작스러운 단속에 장사꾼들 모두가 날벼락을 맞은 것 같은 심정이라고 언급했음.
  - 소식통은 아직은 가짜상품들을 팔지 못하게 할 뿐 물건을 회수하지는 않고 있다며 구체적인 날짜를 밝히지 않으면서 “가짜는 식료품뿐만 아니라 공업품도 모두 회수할 것”이라고 장마당 관리원들이 이미 장사꾼들에게 경고를 했다고 말했음.
- “北간부, 밤새 ‘징비록’ 보며 하루 피로 날려’…소식통 “정치적 색채가 없는 ‘왕가네 식구들’ 등 생활드라마 좋아해”(4/16, 데일리NK)
- 북한 주민들의 남한 드라마 시청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단속해야 할 간부들 사이에서도 남한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평안남도 소식통은 “요즘 중앙(평양)과 지방의 당 및 행정기관(보안부, 국가안전보위부) 간부들도 한국 드라마를 매우 즐겨 본다”면서 “대다수 간부들은 퇴근 후 ‘머리숯’ 명목으로 밤늦도록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 이어 소식통은 “간부들은 여유로운 생활과 가택수색 대상이 아닌 점을 이용해 조용히 가족끼리 모여 시청한다”며 “시청드라마는 대체로 체제비방이나 정치적 색채가 없는 ‘징비록’, ‘정도전’ 등 역사드라마와 ‘왕가네 식구들’과 같은 생활드라마를 좋아한다”고 말했음.
  - 109상무는 마을 인민반장들을 앞세워 수시로 불시 가택수색을 벌이곤 하지만 간부집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평양에는 중앙기관 간부 아파트가 있고 지방에도 도당아파트, 보안국 아파트 등 간부사택이 밀집되어 있음.
  - 소식통은 “무역관계자들이 중국측 대방(무역업자)을 통해 여러 편의 드라마가 복제된 USB를 구입한 뒤 간부들에게 뇌물로 건네주는가 하면 보위, 보안원들은

압수한 영치품을 복사해 넘겨주기도 한다”면서 “간부들 사이에는 ‘또 밤을 팻(밤을 새워)구만, 혼자만 즐기지 맙시다’는 농말이 자주 오간다”고 설명했다.

■ 북 간첩연루 화교들에 종신�형(4/17,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은 지난 3월 27일 ‘조선중앙텔레비죤’을 통해 남한의 간첩 2명을 체포했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 당시 북한당국은 체포된 두 명의 한국인이 북·중 국경지역에서 북한의 최고수뇌부를 모해하려는 테러활동을 벌렸다고 주장했다.
- 북한은 또 “테러분자들에게 포섭된 중국 국적자들에게도 국가테러행위 가담자들로서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언급해 이번 사건에 상당수의 중국화교들이 연관돼 있고 그들 모두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임을 예고한 바 있음.
- 이런 가운데 복수의 북한 내부소식통들이 “당국이 평안북도와 평양시에 거주하고 있던 중국국적의 화교 수십 명을 구금했으며 그들 중 8명은 이미 형을 선고받고 정치범수용소에 구금되었다”고 전했다.
- 최근 국경연선 지역에 나온 평양시의 한 간부는 “체포된 화교들 중 일부가 보위부의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들었다”며 “그들은 중국대사관 성원들과 가족들 앞에서 최고 재판소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 북한은 재판을 받은 화교들 8명과 연관 혐의를 받은 평양시 주민 5명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으며, 형을 선고받은 화교들은 부인과 강제로 이혼 당했고 나머지 평양주민 5명은 가족들과 통째로 정치범수용소에 구금됐다고 함.
- 특히 소식통들은 이번 사건 이후 북한 보위부 반탐과에서 북한 내 화교들에 대한 집중감시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이야기했음.

## 2. 북한인권

■ 프리덤하우스 ‘북한에 정치적 권리, 시민적 자유 전혀 없어’(4/14, 미국의소리)

-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밝혔음.
- 지난 1월 발표한 ‘2015 세계 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을 ‘최악 중 최악의 인권탄압

- 국'으로 지목했던 이 단체는 최근 추가한 북한 부문에서, 주민들이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 각국의 상황을 정치적 권리 40점, 시민적 자유 60점 등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이 단체는 북한의 점수가 3점에 그쳤다고 밝혔음.
  - 북한은 특히 정치적 권리의 경우 선거 과정과 다당제, 정치참여, 정부의 기능 등 모든 분야에서 40점 만점에 0점을 기록했다.
  - 프리덤 하우스는 북한이 김 씨 일가가 독재를 하는 일당제 국가로 의회인 최고인민회의는 당의 결정을 추인하는 허수아비 기구에 불과하며, 정부가 사회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 북한에는 또 부정부패와 뇌물이 만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 단체는 밝혔음.
  - 프리덤 하우스는 북한의 시민적 자유 분야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표현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완전히 봉쇄됐고, 법치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임.
  - 이 단체는 다만 개인의 자치권과 권리 부문에서는 북한에 16점 만점에 3점을 부여했음.
  - 북한에 이동의 자유가 없고, 국내 재정착이 일상적으로 강제되며, 평양에 대한 접근이 극도로 제한되고 있지만 장마당이 많은 주민들에게 정부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임.
- “DMZ 횡단 여성들, 북 인권 제기해야”(4/14, 자유아시아방송)
-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부국장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억압, 통제 등 주민의 무자비한 인권 탄압이라는 할아버지 김일성의 유산을 이어 나가기 위해 여전히 김일성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 김정은 정권은 구타, 감금, 고문, 강제노역 등 온갖 인권 유린의 온상인 관리소, 교화소와 같은 강제수용소를 통한 공포정치를 자행한 김일성 체제의 반 인도적 범죄 행위를 이어나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 휴먼라이츠워치는 김일성 생일을 하루 앞둔 14일 ‘북한: 냉혹한 생일 유산-김일성의 인권 범죄를 기억한다’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음.
  - 이 단체는 보도 자료에서 “북한 정권이 일부 주민에 대한 독재적인 통제로 만족하지 않고 북한 주민의 삶을 모든 면에서 지배하고 공포에 떨게 한다”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지적을 소개하며 김일성의 생일을 축하하는 분위기에

맞서 북한 반 인도적 범죄를 종식시키려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로버트슨 부국장은 김일성은 무자비한 주민 학대와 잔혹한 감시 체제를 구축했고 절대 복종을 강요하는 개인 숭배 체제 하에서 반대세력을 박해하거나 숙청했다고 비판했음.
- 로버트슨 부국장은 여성운동가 30여 명이 오는 5월 북한에서 판문점을 넘어 남한까지 걸어나는 행사를 계획 중인 것과 관련해 이들도 북한 당국에 심각한 인권 탄압의 문제점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음.
- 미국의 글로리아 스타이넴, 영국의 평화운동가 메어리드 맥과이어 등 여성인권 운동가들은 오는 5월 24일 'Women Cross DMZ' 즉 '여성들 비무장지대를 건너다'라는 남북한 평화를 위한 행사를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음.

■ 리퍼트 “北, 인권보호 안하면 고립 더욱 심해질 것” 피습 이후 첫 공개강연 “주민복지보다 무기 개발에 열 올려”(4/15, 데일리NK)

- 마크 리퍼트 대사는 15일 “북한이 주민들에 대한 투자와 인권 보호, 비핵화의 구체적인 조치를 하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관계를 개선하고 평화변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음.
- 피습사건 이후 첫 언론 공개 강연을 한 리퍼트 대사는 이날 열린 한국국방연구원 주최 조찬간담회에서 “북한 정권은 주민복지와 안녕보다 무기개발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음.
- 이어 리퍼트 대사는 “인권보호, 비핵화의 구체적인 조치가 없다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판과 고립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또 그는 “북한이 비핵화 없이 경제를 발전시킬 수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북한은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회답에 나올 수 있음을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음.
- 그러면서 그는 “비핵화가 북한과 관련해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우려는 아니다”라며 “분명한 것은 북한이 보편적 인권을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누구보다도 북한 주민들이 고통받고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북, 해외파견 노동자 행동지침 하달(4/16,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노동자들은 해외에 나가 근무할 경우 지켜야 할 행동지침이 있음.
- 특히 지난해 말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되면서 또 다른 특별 행동지침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 새로 내려진 행동지침은 이미 국가안전보위부를 통해 각국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음.
- 이 같은 사실은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운 대표가 16일 밝힌 내용으로, 행동지침의 입수 경로에 대해 북한 내부를 통해 알려진 사항을 녹취했다고 설명했다.
- 북한 당국은 우선 일하는 작업현장이나 일하는 모습을 외부 사람들이 촬영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내렸음.
- 행동지침에는 구체적인 행동요령까지 나와 있는데, “특히 외국 기자 또는 인권운동가가 사진을 찍거나 촬영할 경우 사진기나 촬영기, 손전화기를 빼앗아 그 자리에서 박살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
- 또한 “구타 도중에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사죄하면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말을 녹음하거나 가지고 있는 손전화로 촬영해야 하며 그것을 해당 단위에 바쳐야 한다”고 나와 있음.
- 해외건설 현장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비인간적 대우 속에서도 돈을 벌어야 함.
- 인권 유린을 당하는 것도 모자라 외부 사람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철저히 감춰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음.

■ 자유경제원, “북한인권, 여성 그리고 북한인권법” 토론회 개최(4/16, 업코리아)

-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4월 14(화) 오전 10시 여의도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자유주의여성포럼’을 개최했음.
- 이번 포럼의 주제는 <북한인권, 여성 그리고 북한인권법>으로 김정은 체제가 저지르는 조직적인 반인도범죄에 대해 가장 취약한 계층인 ‘여성’을 중심으로 자유의 억압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북한인권법’의 제정에 대한 논의와 제언이 오갔음.
- 발표를 맡은 인지연 대표(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 미국변호사(Washington D.C))는 ‘북한인권’ 이슈가 이제는 일부 운동가들의 목소리가 아닌, 국제사회 전체의 의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1년 간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를 강하게 비판했음.
- 인 대표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는 김정은 체제의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가 지난 2014년 2월 공개된 유엔

북한인권 COI보고서에 낱말이 명시되어 있음을 밝혔고, 김정은의 이런 반인도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회부할 것을 권고 내용이 담긴 북한인권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것 역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 인 대표는 COI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북한인권침해의 6가지 범주 중에서도 '차별' 특히 '여성에 대한 차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인권침해의 대상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 할 수 있는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는 단순 가정에 국한된 폭력뿐만 아니라 남성이 대부분인 국가 공무원들, 시장의 치안을 관할하는 요원, 기차 감시요원, 군인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에 대해 성폭력을 저지르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미 하원 외교위원장 "김정은 정권, 세계 최악의 인권침해 정권"(4/17, 연합뉴스)
  -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16일 북한 김정은 정권을 '세계 최악의 인권침해 정권'이라고 규탄하면서 "김정은 정권이 자행한 인권침해 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로이스 위원장은 이날 워싱턴DC 의회 레이번 빌딩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회동한 자리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 로이스 위원장은 보도자료에서 "과거 반 총장과 만났을 때 내가 북한의 인권문제 해결을 촉구했고 그 이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구성돼 곧바로 북한의 끔찍한 인권침해 사례가 드러날 수 있었다"면서 "오늘 만남에서도 내가 반 총장에게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외부에 노출시키고 문제 삼아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 로이스 위원장은 이밖에 반 총장과 미국 주도의 이란 핵 협상, 유엔 개혁 문제, 시리아 사태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 3. 탈북자

- 탈북자 4명 중국 탈출해 동남아 도착(4/16, 자유아시아방송)
  - 4월 들어 날씨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탈북자 구출활동도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음.

- 중국 내 탈북자 구출활동을 벌이고 있는 남한의 민간단체 관계자는 “최근 4명의 탈북자들이 태국 유엔난민 수용소에 안전하게 진입했다”고 밝혔다.
- 이 관계자에 따르면 구출된 탈북자들은 한 살짜리 어린이를 안은 30대 여성 한 명과 나머지는 20대 여성들로 알려졌다.
- 이들은 중국 길림성과 흑룡강성 등에 숨어살다가 지난 3월말에 브로커들의 도움을 받아 한국행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 그는 “중국 장춘에서 운남성 곤명까지 가는 동안 고속도로에는 신분증을 검열하는 공안국 검열 초소가 무려 4개가 있다”면서 “이 초소를 피해 가다보니 큰 보름 이상 걸렸다”고 말했다.
- 그에 따르면 중국 공안의 단속은 10년 전에 비해 상당히 강화되었다면서 “신분증이 없으면 열차는 물론 버스도 승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중국 시진핑 체제 들어 사회치안 질서 확립과 부패척결 바람이 불면서 탈북자들의 한국행은 한결 더 어려워진 것으로 파악됨.
- 또 북한에서는 국경경비가 강화된 결과 탈북 비용이 크게 오르고, 김일성 생일을 계기로 선포된 특별경비주간 때문에 국경을 넘는 북한 주민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서 탈북자 구출 기금 모금 음악회(4/17, 자유아시아방송)

- 오는 4월 26일 미국 매릴랜드 주 베데스다에 위치한 랜던 학교(Landon School)에서 북한 인권을 알리는 음악회가 열릴 예정이다.
- 이번 음악회에서는 탈북자 출신 피아노연주자 김철웅 씨, 그리고 북한에서 선전대원으로 음악 활동을 한 탈북자인 한송화 씨, 색스폰 연주자인 데이비드 타울러 씨가 연주할 예정이다.
- 이번 음악회에서 모인 기금으로는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구출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 재미탈북민연대의 부대표 조진혜 씨는 이미 이번 모금을 통해 구출될 탈북자 4-5명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으며, 탈북자들을 한명 정도 구출하는 데는 미화로 3천에서 4천달러 정도 필요하다고 조 씨는 밝혔다.
- 이 밖에도, 올해 북한자유주간 행사로는 탈북자들이 미국 의원을 대상으로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을 할 수 있는 기회 뿐만 아니라 북한 실상을 알리는 사진 전시

회 등도 열릴 예정임.

#### 4. 이산가족

- 특이동향 없음.

#### 5. 납북자

- 특이동향 없음.

#### 6. 국군포로

- 물망초, 국제단체에 국군포로 송환 문제 호소…유엔, 국제엠네스티, 국제적십자사 등 국제 단체에 진정서 보내(4/14, 코나스)
  - 북한인권단체인 물망초는 국군포로의 송환 문제와 관련해 유엔, 국제엠네스티, 국제적십자사 등 국제단체에 진정서를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 진정서에서 이 단체는 “북한에서는 1953년 국군포로상호간 교환이후 ‘국군포로는 더 이상 없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나, 1994년 조창호 중위가 탈북해 대한민국으로 온 후 81명의 국군포로가 스스로 사지를 넘어 대한민국으로 탈북해 왔으며, 이 분들 중 한 분은 수많은 국군포로들이 자신과 함께 북한탄광에서 노역한 상황을 증언하기도 했다”며 “6.25전쟁 때 포로가 된 국군포로들의 생사여부라도 알게 해 달라”고 촉구했음.
  - 또한, 이 단체는 “탈북당시 함남 검덕광산에 약 600명, 인접 용양광산에 약 400여명의 국군포로가 고역을 당하고 있다고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69명의 국군포로명단을 제공했다”며 “생환한 국군포로가 본인과 같이 일했던 동료들의 명단을 작성해 제공했으므로 정부가 북한 당국과 접촉해 신속히 이를 확인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아울러, “아직도 약 350여명이 살아계신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제는 나이가 80대 후반에 이르러 평균수명을 넘어서고 있는 이 시점에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며 국군포로의 송환을 거듭 촉구했음.

## 7. 대북지원

- 캐나다, WFP 대북 영양지원 사업에 160만 달러 지원(4/15, 미국의소리)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OCHA는 14일 공개한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 보고서’에서 캐나다 정부가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영양지원 사업에 미화 160만 달러(1,601,281)를 기부했다고 밝혔음.
  - 캐나다 외교부 산하 국제개발부의 다이애나 카다지 대변인은 14일 캐나다는 전 세계 개발도상국가 내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인도주의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음.
  - 그러면서 이 자금은 북한 어린이와 여성 등 취약계층에게 식량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라고 카다지 대변인은 덧붙였다.
  - 캐나다 정부는 앞서 올해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의 대북 사업에도 미화 55만 달러를 기부했음.
  -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가 올해 대북 지원 사업에 기부한 금액은 14일 현재 총 215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 줄어들었음.
  -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지원 사업에 각각 미화 90만 달러와 270만 달러를 기부한 바 있음.
  - 한편 세계식량계획은 올해 대북 지원 예산으로 6천9백40만 달러(69,395,000)를 책정했음.
  - 세계식량계획은 최근 유엔이 발표한 ‘대북 인도주의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에서 2012년 기준으로 북한 2세 미만 영유아의 85%와 산모의 절반 가량이 최소한의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음.
  - 또 5세 미만 어린이의 27.9%가 만성적인 영양실조를 겪고 있다며, 단백질이나 미량영양소 섭취 등 적절한 영양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음.

- 세계식량계획은 북한 주민의 영양 개선을 위해 올해 양강도와 함경남북도 등 9개 도 87개 군의 취약계층 180만 명에게 식량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인도, 북한에 밀 등 곡물 지원 계획”(4/16, 자유아시아방송)

- 16일 인도 일간 캘커타 텔레그래프는 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인도가 북한에 밀 또는 다른 곡물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 신문은 인도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 계획이 지난 13일 뉴델리를 방문한 리수용 북한 외무상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 리 외무상은 당시 양국 외무장관회담에서 인도가 2011년 100만 달러 상당의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을 해준데 사의를 표한 뒤 추가 지원을 요청했음.
- 이에 대해 수슈마 스와라지 인도 외무장관은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답변바 있음.
- 인도 정부는 대북 지원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혀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보임.
- 인도 정부는 또 리 외무상이 요청한 스와라지 외무장관의 북한 공식 방문에 대해서는 ‘당분간 방북 계획이 없다’고 밝혀 평양 답방이 조만간 실현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 북한 관영매체는 16일 리 외무상의 귀국 소식을 전하면서 북한이 인도 외무장관의 북한 공식 방문을 요청했고 인도 정부가 이를 수락했다고 전했다.
- 한편 인도 외교부 고위 관리는 리 외무상의 이번 뉴델리 방문이 그 자체로는 그리 큰 외교적 성과를 냈다고 보긴 어렵다고 평가했음.
- 나렌드라 모리 총리가 이끄는 인도 정부가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유대를 강화하는 데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외교행사라는 것임.

■ 영국 NGO, 북한서 42만 달러 규모 재난 대비 사업(4/17, 미국의소리)

- 영국에 본부를 둔 세이브 더 칠드런이 북한에서 40만 유로, 미화 42만 달러 규모의 재난 감소와 비상 대비 사업을 벌이고 있음.
- 이 단체의 한 관계자는 독일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지난해 8월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 이 사업은 함경남도 신포군과 함흥시에서 재난 대비, 대응 능력을 높이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오는 7월까지 진행될 예정임.
  - 세이브 더 칠드런의 관계자는 독일 정부의 추가 지원을 받아 올해 8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 단체는 지난 1996년부터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과 위생 증진 사업을 벌이고 있음.
  - 특히 지난 2007년과 2010년 등 수해 때마다 함경남도 지역 수재민들에게 식수와 의약품, 비누와 양동이를 포함한 위생용품 등을 지원해왔음.
  - 2007년의 경우 함경남도 지역 수재민 8만 명에게 깨끗한 식수와 의약품을 제공한 바 있음.
- 유엔 지원 의료기구, 북 장마당서 암거래(4/18, 자유아시아방송)
- 유엔이 북한에 지원한 의료기구와 약품들이 북한의 암시장에서 팔리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일본의 언론 매체인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북한 내부의 취재협력자가 지난해 10월, 북한 북부 지역의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의료기구와 약품 가격을 조사해보니 주사약과 여성 생리용품을 제외한 대부분 의료기구가 유엔으로부터 지원받은 의료기기인 것으로 확인됐음.
  - 의료기구 가격에 따르면 유엔 물품인 '청진기'와 '혈압계'는 북한 돈으로 각각 3만5천 원, '체온계'와 '주사기 케이스'는 1만 3천 원, '검자'는 1만 3천500원, '핀센트'가 8천 원 등에 팔렸으며 북한산 '페니실린'은 650원, 레바놀은 1천500원, 위생대 10개짜리가 1천800원 등의 가격을 나타냈음.
  - 특히 장마당에서 암거래되는 의료 기구는 북한 내 불법 의료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며 병원이 아닌 개인집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하려는 사람이 장마당에서 유엔 물품, 또는 국산 의료기기를 구매해 돈벌이에 나서고 있다고 함.
  - 이처럼 북한에 지원된 유엔의 의료기구와 의약품 등이 암시장으로 흘러들어 가면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북한 주민에게 팔리고,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불법 의료행위를 부추기는 데는 사실상 형식만 남은 '무상치료제' 정책이 배경이 되고 있음.

- 독일 NGO, 북한 청각 장애인에 '특수시계' 제조 기술 전수(4/18, 미국의소리)
  - 독일에 본부를 둔 대북 민간 구호단체 '투게더-함홍'이 북한 청각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위한 사업에 나섰다.
  - 세계농아인연맹 (WFD)의 북한 연락관인 투게더-함홍의 로버트 그룬드 대표는 북한 청각장애인들이 장애인용 알람시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청각장애인용 알람시계는 정해진 시각에 소리 대신 반짝이는 움직임으로 시간을 알려줌.
  - 청각장애인인 그룬드 대표는 일반인들을 위한 생활용품이 청각장애인들에게는 쓸모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알람시계가 그 가운데 하나라면서,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특수 제작된 알람시계가 필요하지만 북한에서는 구할 수도 없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시계가 있는지조차 모른다고 말했다.
  - 투게더-함홍은 독일의 전자업체인 APE (Angewandte Physik Und Elektronik GmbH)사와 손잡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APE사는 북한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특수 알람시계 100 개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부품과 장치를 기부했다고 그룬드 대표는 밝혔다.
  - 그룬드 대표는 또 APE사의 직원이 오는 5월 1차로 열흘 간 북한을 방문해 현지 청각장애인들에게 특수 알람시계 제조 기술을 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룬드 대표는 이번 계획이 시범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일반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북한 내 다른 기업들과의 협력으로 확대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이 사업을 통해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한 청각장애인들이 사회에 진출해 자립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8. 북한동향

- 특이동향 없음.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